

高承德 코미디

고승덕(高承德) 변호사가 국민회의-한나라당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가 급기야는 한나라당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공인(公人)의 처신으로서는 심히 들쭉날쭉한 추태였다. 국민회의 주장으로는 그는 최유연 여당 후보를 지양한 것일 텐데,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어 이회창 총재와 함께 한하게 오는데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일신상 이유'라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꼭 어쨌든 출된 기본이다.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인가. 공인의 처신은 열거수 일주일에 공명정대하고 친근할까 무거워야 하며, 하건 하고 말면 말아야 한다. 이만한 이치도 모른대서야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인가.

권언언에는 물론 국가법령의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색어도 야당에 투신할 작정이었다면 그런 국가법령의 사안부터 미리 검토해 보고 움직여야 했다.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 결정을 했다기 하구야 하는 뒤집는 것은 이유 여하간에 경망스러운 처신이었다. 왜 우리 정치 지명생들이 이저런 야심만 있지 품위가 없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두고 그가 헌법에 위반

다는 무슨 논평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진상을 알 길이 없지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런 '헌법에 위반' 변신과 변복이 흔했었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번 일로 국민을 우롱한 만큼 그가 말하는 '일신상의 이유'라는 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그런 논평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부르게 고른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요즘 여야 말 씌 없이 '새피 수혈'이라는 말을 유행처럼 쓰는데, 국회의원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유행한 공생할 기간을 통해 재대로 검증된 인물을 써야지 무턱대고 신인(新人)이라는 이유만으로 '새피' 유 유예선 안될 일이다. 오히려 '줄리안 소렐' 같은 젊은 총재주의자들인수록 걸림 번드레할 뿐, 속은 속물(朽物)들의 숙물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고승덕씨의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의 차신교육에 더 힘을 기울여야겠음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열백' 운운하는 한나라당 주장이 설령 사실이든 가정할지라도 그것이 버히나 안맞는구나 하는 것은 당사자와 신변(身邊)변리와 인격수준에 달려 있다.

같은 날 사실 <정치 코미디 연장 말라>에서 "...그런 판에 한나라당이 보이듯한다면 명분 없는 또다른 코미디의 연장일 뿐이다", "여권도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밀실공천문제, 공천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잘 지적하였다.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에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4월 30일 기자의 눈<화 부른 고승덕 카드>에서 "이번 공천은 이총재의 '선진정치'와는 맞지 않아"라며 밀실정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5월 1일 <野, 고승덕 후유증>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과 총체적 난맥상을 비판하고 5월 3일 사실<공천민주화 급하다>에서는 "위로부더의 낙하산 공천의 폐해는 후보공천권의 문제"라며 3김정치, 정당의 기강과 위계질서, 정치자금원천 등 정당전반의 문제를 강조했다.

한겨레는 4월29일 사실<'젊은피'라면 다 좋은

다. 기자의 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었다. 특히 기자의 논조는 DJ의 '젊은피 수혈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수언론의 반기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치후진 현상을 대안 없이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4월 30일자 사실 <고승덕 파문이 말해주는것>에서 "우리의 정당들이 과연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정치지명생들이 철새근성 등 못된 습성을 밝아간다면 미래가 어둡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개인의 정치적 행태가 지닌 문제점 보단 초점보다는 우리 정치 전체의 문제점으로 보도한 것이다. 또 5월 1일 <젊은피도 혈액검사 해야 할 판이니>에서는 "당선만을 따지는 후보선정과 지도부의 밀실공천 풍토가 '철새형' 정치지명생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공천제, 대의원수 확대, 미국식 예비선거제 도입 등을 제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가>에서 "고승덕 파문은...수혈론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수혈론이 당선가능성만을 위주로 하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수혈론이 결실을 맺으려면 당이 민주화되어야 하며 젊은피도 반드시 겸사해 봐야 한다"며 수혈론에 대하여 충고를 하였다.

같은 날 <밀실공천이 '고승덕 소동' 뿌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이 정당의 밀실공천 관행에 있다"며 "정당 내부가 준비된 수혈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식 총장이 주장한 고씨의 납치주장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확인 사실이 안된 의압문제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확인파 사태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한매일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라카락> 고승덕씨 후보사퇴파문>(4/30,4면), <고씨 후보사퇴의 변>(4/29)에서 이번 사건을 가족적인 일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또 사실이나 칼럼대신

고승덕의 새 내각은 憲制 - 권력소름 2인

李 총재 惡材만 잇따라 분위기 침울 / 박 총재 집안문제 불거져 채면 손상

박 총재 집안문제 불거져 채면 손상

이러니 저러니 해봐도 귀찮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고변호사가 돌아, 의사를 위한 4월 초에 손흥수씨와 사내를 키웠다"는 주인의 입회에도 박 총재는 할 말을 잃었다. 박 총재는 지난 말 동안 고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그러나 박 총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다. 손흥수(孫興洙) 박 총재는 "고변호사" 공천 자체가 안 될 수 있는가"에서 박 총재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수인(李秀仁) 박 총재는 30일 사이의 고승덕(高承德) 변호사의 서분 송라단 재한기 후반기에 의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과 사위의 불행사나운 선거전은 피하게 했지만 이로 인한 구설수 오르는 등 망신살 뺨임"등 공천, 수혈론 문제보다는 집안문제, 장인과 사위의 대결로 이번 사건을 즐기는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 태도로 사건의 양상을 전달하고 논평 기사를 통해 이면을 분석해야 할 언론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이수인 의원사건 보도 ->

이 사건 보도 역시 언론사간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문제는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두 의원이 주장해온 '국민적 대의' 사이의 갈등인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갈등'을 심층보도하여 정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다.

조선일보는 두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5월 1일 사실 <한나라 이-이 의원의 모양새>에서 "두 의원행동은 당원으로서 문제있다"며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했다. 동시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잔류한다면 이는 정치도의상 잘못되는 것"이라며 "좀더 투명한 처신 취해라"라고 주장했다. 이는 두 의원이 그렇게 행동한 것과 당정 회의에 참석한 근본적인 이유는 도의 시한 채 이들의 행동을 단순한 개인적 차원으로 몰아부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두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논평과 같아, 한나라당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또 한번 제기되었다. 중앙일보 역시 4월 30일 기사 <반란표소동-퇴출명령, 사사건건 당론

상황나열식 보도기사만으로 신문지면을 채워 사태의 이면을 분석하려는 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5월 1일자 <박총재는 풀리고...이총재는 꼬이고>를 보면,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심정표현에만 주력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도의시켰다. 특히, "박총재의 자택에는 철쭉이 활짝 피어있다. 30년전부터 살아온...당시 박정희 전대통령이 준 80만원을 보태서 샀다" 라는 가십성 기사로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한편 흥미위주의 보도태도가 가장 두드러진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4월 28일<6.3선거,

의 불쌍사나운 선거전은 피하게 했지만 이로 인한 구설수 오르는 등 망신살 뺨임"등 공천, 수혈론 문제보다는 집안문제, 장인과 사위의 대결로 이번 사건을 즐기는 태도를 보였다. 객관적 태도로 사건의 양상을 전달하고 논평 기사를 통해 이면을 분석해야 할 언론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다.

社說

'한나라 李-李 의원의 모양새'

고승덕(高承德) 변호사 사태 파문과 불거진 이-이 의원(李秀仁) 이미경(李美卿) 의원과 '국회(國會) 행위' 유계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두 의원은 당내(黨內)와 당외(黨外)로 분류되어 각각의 정치적 행태를 평가할 수 있다. 두 의원은 당내(黨內) 사태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반대로 부연하여 제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크로스 보딩(자유무위)의 위반에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상 국회의원은 정치행위에서 자신에게 반(反)당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부연한 점이 있는 것은 이-이 의원이 부연한 점 때문이다.

부연에 따르면 이-이 의원은 이번 달고도 지난 1월 초에 입원하여 남한을 떠나고 1월 초 입원하여 하차해 '당원직 유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제정안 통과에 불응하는 등 남한 불복시제시 여간 있다. 이미경 의원도 고위노조위원장 하선한 전 예 있다. 이들은 이번엔 '당내(黨內) 사사건건 사유(私情)를 배제하고...라는 등 자신들의 '사유(私情)에 불복' 소신과 사의를 밝혔다. 크로스 보딩은 미국 등 중앙정체가 크로스 보딩에서 상용화해, 각 나라의 내각제 형식이든 아니든 상용화해, 그러나

이-이 의원의 경우도 모든 면에서 부연한 것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내각(內閣) 제정(制定) 여부 등 7월 1일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責任)을 지는 면에서는 부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이 의원의 '국회(國會) 행위' 유계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두 의원은 당내(黨內) 사태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반대로 부연하여 제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크로스 보딩(자유무위)의 위반에 문제가 있다. 또한 헌법상 국회의원은 정치행위에서 자신에게 반(反)당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부연한 점이 있는 것은 이-이 의원이 부연한 점 때문이다.

부연에 따르면 이-이 의원은 이번 달고도 지난 1월 초에 입원하여 남한을 떠나고 1월 초 입원하여 하차해 '당원직 유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제정안 통과에 불응하는 등 남한 불복시제시 여간 있다. 이미경 의원도 고위노조위원장 하선한 전 예 있다. 이들은 이번엔 '당내(黨內) 사사건건 사유(私情)를 배제하고...라는 등 자신들의 '사유(私情)에 불복' 소신과 사의를 밝혔다. 크로스 보딩은 미국 등 중앙정체가 크로스 보딩에서 상용화해, 각 나라의 내각제 형식이든 아니든 상용화해, 그러나

두 국회의원의 '해당' 행위

국회의원이 독감의 헌법기관임을 밝힌 것은 사실이다.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법행위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형식은러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은 적어도 소속정당의 물론, 당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못지않게 소속정당을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하다. 정당정치를 위해 당원으로서의 당원-당규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의회주의 정치 현실이다.

20일 한나라당 이수인·이미경 두 의원이 환경노동위에 출석, 여당이 제출한 노사정 위원회 관련법안에 찬성투표를 한 것은 의회주의의 바탕인 정당정치와 배치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송파구 후보로 결정됐다가 이를 전격시정해 고승덕변호사분과로 삼일위 불참을 당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권을 어기고 삼일위에 출석, 찬성표를 던졌다.

두 의원은 관련법안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서라도 소속정당의원이 모두 정확히 제라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입

법적인 법안 처리의 물러리 역할을 충실히 한 셈이다.

이들이 이처럼 당권을 따지지 않은 '소신'은 어디서 나왔을까. 두 사람은 모두 전국구의원이다. 아무리 당권을 위반하고 해당행위를 해도 스스로 양심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제명 등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소속으로 행동이 더욱 자유스럽게 된다. 이같은 법의 틈새를 이용한 두 의원의 행위는 정치를 본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당원권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인된 도리다. 만약 자신의 소신과 당권이 맞지 않을 경우엔 소속정당을 떠나는 것이 마땅한 처신이다. 법의 틈새를 이용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해당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심화시켜 정치를 냉소화시킬 우려가 있다.

변질지 시비는 부끄러운 우리 현실의 한 대목이다. 과거에 집권세력들은 물론 있으면 야당의 견제를 회색하고, 또 이를 통해 야당의 견제를 허드레내기 위해 새로운 변질자를 만들어 내곤 했다. 두 의원은 야당은 현정사와 대립지 못한 친목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기 않도록 처신을 분담해야 한다.

어거 '무늬만 당원' 패섬죄>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5월 1일 사설 <두 국회의원의 해당 행위>에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못지 않게 당원의 의무가 중요"하다며 이번 경우가 "정당정치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쓰고 있다. 전반적으로도 개인의 신념이나 소신을 무시한 채 '당명'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 사설에서는 현재 정당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크로싱 보트(Crossing Boat)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4월 30일 두 의원의 인터뷰를 담고 전문가 의견과 함께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타 신문에 비하여 심도 있는 접근을 하였다. 같은 날 박스기사 <이수인, 이미경 의원 소신투표>에서는 "두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찬성표 던짐"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소견, 합리적 의사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는 이 보도에서 두 의원의 소신투표로 노사정위법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는데 무게를 실어 다른 신문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평가다.

대한매일은 5월 1일 <당론보다는 국익 위해 행동한 것>에서 두 의원의 이야기를 인터뷰식으로 처리한 것은 긍정적인 보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당의 정치의식 수준이 의석수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지 않은 게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고승덕 파문과 두 의원의 교차투표 과정에서 보듯이 이 사건은 별개가 아닌 개연성을 지닌 사건이다. 혈연, 의리, 인맥 등 전근대적인 정치적 도의에 아직도 우리정치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그럼에도 언론은 아직도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요소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지적이다.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짧은피'는 개혁적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승덕 파문에서 대표하는, 소신과 관계없는 출세지상주의와 연관된 위험한 '수혈'들이 있다. 이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중요 당직자의 눈에 띄어 적당히 입당만 하면 출세한다는 기성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로서, 언론은 이번 사건을 밀실공천문제, 정당내 비민주화문제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투명성을 갖춰야 하며 건강한 구조로 탈

"당론보다 국익위해 행동할것"

■ 한나라당기원 최부민 李壽仁·李美淑의의

20일 노사정위원회 설치법안을 다른 국회 위원회로 넘겨 처리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당기원에 최부민 이수인(후북)·이미경(후美淑)의원은 30일 이도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전국구인 이들은 '당론'도 중요하지만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인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법안은 여야에 따라 찬성-반대해서 심의되고 있던 법안"이라며 "당지도부가 정치적 불합치(美淑)연호로서 후보

시제 진을 불고나와 노사정이 삼일 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현재의 삼일 위 노동정국을 무시는 현국정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경 의원은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법안은 노사정위원회를 명실 대가 아니고, 국가의 존엄을 생각하고 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一)을 무조건 통과시키고 오직 국가의 국익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러한 결정이 내리자마자도 소신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들과 관계수위를 높고 관리할 줄 알고다. 차에 두 사람을 제명,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외적으로도 "고승덕사"에 대한 긍정 입장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싶지만 어떤 경우와 악수가 이어진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들이나, 전국구인 이들은 해당조치를 당내에서 의석(2)에 줄여주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론에 반해 교원노조법안에 찬성하고, 신원배(行憲)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불참했다는 이유로 당권 유지가 어려운 한나라당에서는 여석이 2배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당론에 반해 교원노조법안에 찬성하고, 신원배(行憲)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불참했다는 이유로 당권 유지가 어려운 한나라당에서는 여석이 2배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 2005년 7월 20일 연합뉴스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제 2 민주화 투쟁' 선언은 야당대표의 대어 강경투쟁 선언으로서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선언'이 '민주화 투쟁'이라고 명명할만큼 대의명분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실정파탄 등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대어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혁적인 내용보다는 단지 당의 성격과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6·3 재보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의 기반을 다지고 정국운영에 주도권을 갖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신문보도들을 살펴보면 이 총재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는 등 비중있게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다.

조선일보는 5월 7일자에서 <"국민을 빙자한 독재" 이회창 총재, DJ 정권 상대 제2민주화 투쟁 선

언>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중앙, 동아도 각각 <"제2 민주화투쟁 하겠다"/ 독재화 국정파탄 두고 볼 수 없어>, <"현정권 민주주의 빙자한 독재">라며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제목에 올렸다. 물론 보도기사 제목만으로는 그 신문의 보도태도를 단정하기는 무리다. 따라서 이후 해설 및 사설 기사를 통해 그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독 조선일보는 기사 전반적으로 이회창 총재의 '제2민주화 투쟁 선언' 및 출마선언과 관련, 이 총재와 한나라당의 입장에 매우 기울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기관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긍정적 태도를 내비쳤다.

조선일보에서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 기사는 5월 7일자 사설 <이회창 총재의 시국인식>이 대표적이다. 이 사설은 "이회창 총재는 그의 격렬한 시국인식의 근거로서 집권 측 인사정책의 문제점, 연금 파동과 의보통합 등 정책상의 문제점, 구조조정 작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제2 민주화 투쟁 선언' 관련 보도

5월1일 - 5월11일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일 국회의원의 당직자회의에서 김영배 총재대행이 손세일 총무·권근홍 사무총장과 함께 '제2 민주화투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정봉 기자



조선 한나라당 총재가 7일 확대 당직자회의 시작 전 이부영 총무·안태수대변인과 함께 대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신인식 기자

“더 안밀린다”黨안팎 경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강도높은 대(對)野(野)투쟁 선언은 당내외를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다.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인오만 이당을 대항한다고 떠벌렸을 뿐 진중한 과제로 존중하지 않았다”며 “독재와의 국정비판은 미끼이며 제2 민주화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3 정부조직법 남치기 처리와 고승여(高承義)피종 등으로 누적인 여당이 대한 불만과 불신이 대어 강경투쟁을 분가파에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6·3 재선거와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엔 여당 특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여권이 정부조직 개편을 강행한 것도 언론과 공직사회 정의를 통해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어 투쟁 자체가 일단 여당 심존권 사수 차원으로 이해되는 분위기다. 정국을 넘어선 현안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여당에 대한 견제를 거두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다음주 서울·부산에서의 대규모 정의투쟁을 앞두고 ‘집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의 측면도 있다.

당 내부적으로는 일련의 사태가 총재의 지도력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 같다.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면 서까지 “경건박진 투쟁”을 운운하며 강경으로 몰아붙인 것도 ‘총재제 재 사수’를 실재로 결다는 예기다. 당내에선 비주류층 중심으로 “고승여 피종과 정부조직법 남치기 처리에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밖에 당 일각에서 내각제 조기공포화를 요구하며 이회창체제를 뒤엎고 있는 것까 두면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문제는 총재의 강경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별다

李총재 제2민주화투쟁 선언 배경

‘野파파’ 정면대응- 내부 도전도 차단 強攻 소독없이 여야관계만 경색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와의 국정비판’을 미끼로 제2의 민주화투쟁을 선언했다.

당장 여당은 “시민불만을 고려해 과잉을 완화한 지휘할 조보다 못한 수준”(鄭東夏대변인)이라며 총재를 배도라고 있다. ‘핵심은 야당정략’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에 이어 “한나라당의 정의투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며,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만 할 것”(金命植총재권변대행).

“막대한 당내 입자들 대외투쟁으로 강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李洪宰 부대변인)며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투다. 여기에 당내에서조차 “야당도 국회 내에서 승부하는 심숙한 참치를 보여야 한다”(趙源鎔 대변인)면서 정의투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견이 적잖아 여론의 호응이 여의치 않으면 총재로선 어렵고 고독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이종민 기자 <imlee@joongang.co.kr>

이 여의치 않으면 이총재로선 어렵고 고독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맺었다. 중앙일보가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 ‘비아냥’이라는 어휘와 ‘어렵고 고독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편파적인 시각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사실에서 이 총재의 ‘선언’과 행보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5월 7일자 사실 <야당의 시국관과 장외투쟁>에서 “우리는 그의 시국인식의 적실성을 떠나 IMF 사태가 극복되

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책임을 여당과 함께 가진 야당의 장외투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쓰고 있다. 이어 “새로운 대정부 비판과 견제의 방법으로 국민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 5월 8일자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4면에 실린 ‘여야 입씨름 난기류’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 이 기사는 제목을 <“활복하라” “막가파냐” 정국살벌>로 달았고 기사내용은 여야간의 거친 입씨름을 생중계한 식이었다.

한편 5월 11일자 사실 <이총재 출마를 보는 눈>에서 중앙은 “여당은 야당총재를 꺾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거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해 보겠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야당도 총재가 나섰다 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거나 총재의 당선으로 정국 우세를 차지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 여야 모두 이번 재선거의 의미를 확대해석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야 모두에게 시의 적절한 주문으로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제목, 기사, 칼럼 -이 총재에 대한 논조 가능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5월 8일자 3면 해설기사 <실정부각 반대 DJ勢 규합 의도>를 보면 ‘6·3 재선거 앞두고 정국 주도 장악 포석’으로 분석하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는 이총재의 강공 드라이브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또 당 안팎에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둘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의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 그리고 정국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에서는 대체로 편파적 태도의 기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목들이었다. 많은 기사들이 이 총재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간접적으로 이총재를 지원하는 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5월 7일자 1면 기사 제목 외에 3면 이 총재 일문일답 기사는 <“현정권 독재화로 들어서 … 이를 막아야 경제도 산다”>로 이 총재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다음날인 5월 8일 4면에서도 [이총재 ‘민주화투쟁’ 전략]에서 <“여론 등에 업고 실정 부각”>로 이총재에 힘을 실어주는 제목을 뽑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었다는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 총재가 ‘제2민주화 투쟁’을 선언하기 훨씬 전인 1일자 칼럼 <이회창 총재, 원칙주의자인가>(魚慶澤 칼럼)가 눈 여겨 볼만한 내용이었다. 이 칼럼은 “최근 최대 정치현안이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한 이총재의 태도를 따져 묻고 있다. 또한 ‘정국불안 야당도 책임’ 등 언뜻 보면 정국운영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총재의 지도력 발휘를 애타게 기다리는 투의 내용이다. 일부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는 속뜻을 분명히 밝히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 원칙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자, 3김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주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깨끗한 지도자,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정의감으로 무장한 ‘새시대의 정치인’이라는 믿음 때문에, 1천만명에 가까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총재인데 말입니다. 두 분

(DJP)의 내각제개헌 미봉 때문에 흐려진 정국을 더욱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총재께서 먼저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DJP를 엄하게 추궁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큰 정치’를 앞장서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총재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논조는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기사, 제목, 칼럼 모두 일맥상통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역시 조선, 중앙과 마찬가지로 여당에 우선 책임을 지우는 태도를 보였다. 5월 7일자 사설 <이총재의 선택과 야당>을 보면 “여당은 이총재의 선택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왜 그 같은 선택이 나왔을 지를 따져본 뒤,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었는지 자성해야 한다”며 고 했다. 또 ‘무턱대고 『민주화시대』에 웬 민주화 투쟁이나, 고 비아냥대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를 잃어버린 사람이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으려는 생각을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5월 11일자 <이총재의 출마를 주목한다>에서는 우선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다. “벌써부터 여당은 『이회창 죽이기』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입장 표명하였다. 이어 “또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김대중 정권의 중간평가로 몰고 간다는 계산인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여당 후보와 겨루면서 그것을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보는 것은 가당찮은 논리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여야의 힘겨루기로 몰아가려는 태도도 드러내었다. 같은 사실에서 “여당은 이 총재를 최대한 흠집내기 위해 엄청난 공세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당은 이총재 아들의 병역문제, 총풍·세풍 사건 등 낡은 무기들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하

社說

이총재의 출마를 주목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으로 밝혔다. 그의 출마선언으로 송파갑 재선거는 공동여당의 연합공천을 받은 자민당의 김희환씨와 함께 사실상 두사람의 싸움으로 좁혀지게 됐다.

우리는 이회창씨의 출마 자체에 대해서 열광할만한 생각이 없다. 다만 송파갑 재선거에 야당 총재인 이회창씨가 출마한다면 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눈높이는 지역선거에 합당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번 선거를 대의투쟁의 장으로 삼지 않아야 하며, 여당은 이같은 기준을 역기위한 자세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다.

반세기부터 여당은 '이회창 콕어기'에 내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야당 총재의 기가 적고, 야당이 위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 정권남이 김대중대통령을 비호, 321세를 얼마나 압박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지금의 공동정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또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김대중정권의 중진행기로 보고 있다는 계산인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당총재가 출마하는 지역의 재선거를 중진의 중간선거로

보고 가려는 발상은 국민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여당 후보와 겨루면서 그것만 중진의 중간선거라고 하는 것은 가당찮은 논리이다.

이총재의 출마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국교섭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원내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어떤 여당은 뒤늦게 송파갑에 뛰어든 이총재의 행동이 몇몇지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연구자인 정호 재선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 이회창씨는 송파갑에 나가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한 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송파갑 재선거전에 양측은 강단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총재의 체면을 파서, 여당은 이총재를 최대한 흡입하기 위해 엄청난 공세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부터 여당은 이총재 이름의 범여 문제, 호풍·세풍시킨 등 '너는 주기' 등을 재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갑 재선거는 다른 선거와 남이 아니다. 정치권이 정치개혁 한다고 어느 때보다 박차를 높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낡은 수법의 흑색·비판·짜투리를 펼쳐서, 관공개인 시비방으로 온나선선거 재일립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였다.

그러나 아들 병역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총풍과 세풍 사건 등은 '낡은 무기'로 치부하기에 너무 중대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무조건 정치공세로 해석하는 이러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매일은 여당 및 정부쪽 의견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5월 7일자 사설 <대화등진 '장의정국'을 보고>에서 대한매일은 "장의투쟁에 나서는 여야를 보면서 이러한 작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때에는 ...여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또 야당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는 비판과 정치권 전반이 눈총을 받고 있는 판국에"라며 "대화정국의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대한매일은 5월 8일자 3면 박스기사 <한나라당 강경노선 민주계 매파가 주도>라는 기사를 통해 이 총재의 '제 2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는 구체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며 그 이면을 분석한 기사다. 그러

나 이 기사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당부나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한 비 판이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같은 날 7면에 실린 칼럼 [대한광장]은 현 정국에 대한 비판 및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되어 좋은 기사로 주목받았다. <한나라당 부산장의집회>(김동민 한일장신대 언론학 교수)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한나라당의 서울·부산집회와 관련, 부산집회는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여론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데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 여당 역시 독선과 독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야당이 야당다운 자세를 보이지 못할 때 여당의 독선과 독주는 막을 수 없다"며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이라는

제하의 사설은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단일안과 관련, 야당에서도 여당의 안에 대해 폄하하거나 비난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내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공동 여당 역시 겸허하게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함도 언급했다.

한편 대부분의 신문 모두 공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폈다. 대한매일은 5월 11일자 사설 <죽고 살고식 선거는 안 된다>에서 '과열혼탁, 정국파탄 등 죽고 살기식 선거는 안되고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사설은 6·3 선거를 신중하게 다루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여야 후보중 한 사람이 알아서 사퇴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총재의 선언 및 출마에 대해 대

정국돌파용 강경카드

■ 이회창 총재 투쟁선언 속뜻
대여 경고성력
달 결속·민심함남 따라
제한전·전면전 갈릴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간지 기자간담회에서 정국에 대한 '강경'민주화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5일 '제2의 민주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 또다시 대의투쟁의 장을 열었다. 지난 3월17일 여야 투쟁 선언으로 조성병연 대화정국으로 한남어 만에 다시 대치할 태도로 돌아선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정권비판투쟁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이번 선언을 계기로 실제 대의투쟁으로 치달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여야가 정치개혁 협상 시한을 6월말로 합의한 바 있어, 늦어도 6월초부터는 다시 여당측과 대화 수밖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유초 대의투쟁 때보다 시큰둥한 것이다.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의원들로서 대의투쟁보다는 지역구가 더 급한 문제인 게 사실이다. 거꾸로 강경투쟁에 앞장서던 이들이 이번 운동을 이끌지도 한나라당으로부터 믿음이 아닐 수 없다.

당 한원에서 이번 투쟁선언을 일종의 '경고 사격'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 총재의 말 한마디가 한나라당을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목처리 쟁이 세를 차단하고 대국로 양민당의 양정을 결정할지를 삼가시키면서 '대의투쟁에 나가기'에 앞서 국민에게 이해 구하고 싶지만 현 국외로 가는 게 아니라고도 보인다.

"국정 바로잡아야 경제회복"

이총재 일문일답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6일 일간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정권비판과 국기를 위해 선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부 대의투쟁 계희문? 그동안 주로 서울과 경남에서 한의정회를 열었는데 요양에서 개최할 참이요?
—당 민주주의투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만들어 당부를 결정할 것이다. 먼저 서울과 부산에서 규탄대회 열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서울 부산 대구 마산 구이 등에서 한의투쟁을 했다. 국정과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당시와 서울의 실업자가 주로 대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취지였다. 앞으로는 중소도시로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녀들만 지원할 과일 때 왜국인 투쟁 차질과 국민들만 동원되어 노조에서 과잉활동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마당에 경제회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한의투쟁에 나서는 것은 옳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바로 설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외국자본이 들어와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먼저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여어준제가 바로 간여야 한다.

—한의투쟁이 6·3 재선거를 가능할 정치공세라는 지적도 있다.
—재선거나 당내 문제를 유도하기 위한 알곡한 생각이 아니다. 국정과반과 독의화를 막기 위한 나선 것이다. 이번 속한에선 정권을 위한 것이다.

—한정권의 성취를 어떻게 보는지 좀더 명확히 해달라.
—국제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민주정권으로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울 소-글쎄요" 양분>(5/7 5면), <"시대착오적 발상"> 등 대체로 각 기사의 제목에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3면 <정국 돌파용 강경 카드>라는 제하의 해설 기사에서는 "당내 분위기도 올초 대의투쟁 때보다 시큰둥한 편이다.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의원들로서 대

여투쟁보다는 지역구가 더 급한 문제인 게 사실이다"

"당내에선 또 대화정국으로의 전환 이후 당내 비주류나 일부 중진들의 내각제 공론화 주장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당내 갈등이 터져 나오려는 조짐을 차단하려는 데 이번 강경발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5월 11일자 사설 <이회창 총재의 출사표>를 통해 우선 "이 총재의 입후보가 공식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터져 나오는 여야의 치열한 정치공세는 이번 재선이 진흥당 선거로 전략한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치 이탈을 막자면, 정치권 스스로 이번 재선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 가운데 단지 두 곳 그것도 한 곳은 유권자들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지역구의 재선거 결과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다"라는 점과 "정권에 대한 심판 운운하는 것은 과대포장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전략일 것이다. 이래저래 6·3 재선이 과열될



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상류층부인들의 과소비행태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분노를 살만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부패사슬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덕적인 질타의 대상은 될지언정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방송3사가 생중계하는 청문회의 대상으로 적합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드러난 고관부인행태>라는 기사 등을 통해 호화사치행태를 부각시키며 사건을 부풀렸다. 그 선봉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24일사회면에 <고관부인들 행태 드러나>라는 기사를, 26일 『어느 귀부인들의 하루』라는 사실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행태는 ...우리사회의 좋지 못한 속성들이 응축"돼 있다며 "수다떨기, 때로 몰려다니기, 폼내기, 고급쇼핑...그러다가 '로비와 뇌물'의혹으로 번진 게 옷사건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30일 4면에 <미-일선 공직윤리 가족에도 적용><한국에선 외제옷-밀수보석 구입...사치로 '얼룩'>이라는 제목의 「긴급진단-고위공직자 부인」 기사를 게재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아내들을 부패와 사치의 상징처럼 몰아 부치며 옷로비사건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갔다. 반면 한국일보는

26일자 사회면에서 "『옷로비 의혹 사건이 과연 국회청문회 대상이냐는 지적과 함께 도덕적으로 증인들보다 우월할 것이 거의 없는 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는 기사를 보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증인이나 의원들간의 인간관계나 이력, 답변태도, 외모의 특징을 들춰내어 흥미거리로 삼는 것도 본질을 흐리는 보도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26일자 기사에서 정일순씨의 머리모양이나 옷, 말투 등을 비난하는 보도를 했고 <언니 배정숙-아우 연정희/ 애(愛)에서 증(憎)으로(한국 25일 5면)>, 입위주로 나온 네명의 사진과 발원내용을 요약한 기사를 실은 조선27일자 9면, 이형자씨 세자매의 답변태도와 방청석에서의 태도를 기사화한 동아 26일 4면의<뚝뚝뚝친 세자매> 등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앙드레 김 관련기사 역시 그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불편함때문인지 그의 증언내용보다

특이한 외모와 이름,의상 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다뤄 흥미위주의 보도태도를 드러냈다. 박스로 다루지 않은 신문은 한국과 대한매일뿐이었고 기사를 게재한 신문중 회화화가 심한 것은 조선,동아,중앙이었다. 8월25일자 사회면에 조선일보는 <청문회 여장거구 "앙드레김...아니 김봉남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본명 대자 좌중 폭소/"나이 64세"엔 놀라/흰색 무대의상에 /눈화장-루즈까지>로 중간제목을 달았고 동아는 <"앙드레김 본명아니잖아요"편찬에 "김봉남 64세입니다"> 중앙역시 <증언대서도 튀는 앙드레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보도내용 역시 "그의 체구는...연정희씨의 2배 이상으로 보일 만큼 장대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콧소리가 약간 섞인 여자 목소리처럼 나직했다(조선)" "질은 화장에 여장을 연상케하는 특이한 외모...주요증인도 아니면서 변호

사를 대동한 것도,증언 첫머리부터 '본명소동'을 빚은 것도 관심(동아)" "풀을 먹여 통을 넓힌 흰색 면바지에 ...크림을 발라 뒤로 넘긴 특유의 머리스타일...(중앙)" 등으로 흠집내기식의 보도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항상 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앙드레 김의 외모와 개성은 매스컴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한국의 자랑스런 디자이너로 칭송받던 그를 증언 의적인 것을 빌미로 문제시하는 것은 그의 남자답지 못한 요소가 점잖은(?) 국회와 언론의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의상실의 옷값이나 고객유형, 당시 분위기등만 있을 뿐 연정희씨가 산 옷값의 액수등 청문회 취지와 관련된 증언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연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이은혜씨의 경우도 조선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특정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동아만이 26일자 『기자의 눈』을 통해 "옷로비 의혹사건의 진실 규명노력이 뛰어난 디자이너에 대한 '회화화'를 넣은 것은 서글픈 일"이라는 지적을하여 돋보였다.

여성에 대한 회화화는 의원들에게도 예외없이 나타났다. 경향은 28일자 <청문회장 달구는 '좌중우돌' 여전사>라는 박스에서 한영애의원은 <'청와대의혹'등 육탄방어 도 지나쳐 비난여론>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속사포 쏘는듯한 '하이트' 증인 다그쳐 감정자극도>을 중간제목으로 달아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중앙도 26일자 <증인에 신문받는 한영애의원>이라는 기사아래 <"증거대달라"이형자씨 역습에 "나중에 대겠다">를 중간제목으로 달아 한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한영애 의원의 태도가 지나친 점이 많은 것은 사



실이다. 하지만 증인신문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은 남자의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한 의원과 비슷하게 황우려의원도 이영기씨에게 무안을 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이영기씨의 개성으로 다루어 졌다. '속사포 쏘는 듯한 하이트'이 문제가 된 김영선의원의 경우 동아는 9월1일자 4면 <한나라 여전사 김영선>이라는 기사에서 "법은리상의 허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김전총장을 곤혹스럽게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감정 조장하는 언론

몇몇 신문이 야당의원의 지역색조장 발언을 묵인하거나 증인의 사투리 발음을 부각시켜 지역감정자극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순 라스포사 사장의 강한 전라도 사투리를 사회면 박스로 다룬 신문은 26일자 한겨레, 조선,중앙등 3개 신문이다. 그중 지난 대선때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로 비판을 받았던 조선과 중앙이 좀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정일순씨 '좌중우돌'증언><튀는 옷차림...더 튀는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두 신문은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꾸어 보도하는 관행을 깨뜨리고 정씨의 발언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정씨와 그 남편의 출신학교까지 거론하여 비판을 받았다. 언론의 책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도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정씨의 행

동과 발언이 워낙 돌출적이기는 했으나 웃로비와 대담유무를 밝히는 데 사투리를 인용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 채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라는 비판이다.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서훈의원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28일자 한국과 동아,한겨레만이 "노골적인 지역감정 자극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판을 해 침묵을 한 타 신문들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외에도 흥미거리에 집착하는 보도가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나타난다. 한국일보 8월27,28 이틀에 걸쳐 김태정,이건개,진형구 3자의 관계를 <기구한 동문대결 청문회 두증인><이건개,진형구 '기구한 만남'><6년만에 뒤바뀐 만남 김태정-이건개>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2단박스로 보도했다. 증인과 신문하는 의원사이의 인생유전은 흥미있는 요소라 어느 신문이나 한 번은 다루었지만 한국일보의 경우 파업유도 진상규명보다 가십성 기사에 치중함으로써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이다.

청문회 무용론 유포하는 조선, 대한매일

양대 청문회 기간동안 조선과 대한매일이 청문회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당리당략적 태도, 증인들의 거짓진술과 제도상의 미흡함으로 인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 시원하게 규명되는 진실은 없고 불신이 증폭되었다. 따라서 청문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비난과 회의적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도 <증인은 떠 넘기기... 의원은 욱박질>, <새 불씨만 지핀 실패한 청문회>, <진실 규명 못한 채 허우적 실패한 청문회 재판될 듯> 사실보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몇몇 신문들을 빼고는 사실이나 기자수첩, 칼럼 등을 통해 청문회의 성과를 알리기엔 미흡해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동아와 한

겨레가 적극적으로 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문회의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하다는 점에서는 한목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청문회무용론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포시킨 언론이 있다. 청문회 내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연씨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던 조선일보와 연씨와 여당에 유리한 증언을 제목으로 뽑는 등 연씨를 싸고도는 듯한 대한매일이 그렇다. 조선일보는 25일 <판 세상 돈 잔치 얘기 헛갈리고 짜증만 더해>, 26일<편한 거짓말 3류 코미디 시민분노>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회면에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도했다. 26일의 <웃사건 원점에서 재수사를>이나 27일 <이런 따위의 청문회> 등의 사실을 통해 철저히 수사를 위해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청문회의 성과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특히 25일 <청문회 '눈물 쇼'> 26일 <'아니다, 모른다'> 27일 <'귀막은'국민회의> 등 연이은 기자수첩에서 "여야의원들의 무능과 한계" 여당의 아전인수격 태도 등을 비판하며 청문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일변도로 보도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매일 역시 8월 25일 사회면 <그 질문에 그 답변... 청문회 왜 하나> <청문회 시청률 낮아> 26일자 7면 정치부기자의 <청문회 무용론> 27일 7면 <청문회 풍경> 28일 사회면 <청문회 그들만의 공방> 등을 통해 역시 청문회의 성과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아 청문회 무용론의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정감시보도' 실종, '국정감시장 보도'에 그쳐

I. 들어가며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는 지금 시점이 김대중 정부의 집권 중반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기간에는 3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정감시단을 조직화하여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정감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 감시활동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시민감시단 외에 국정감사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집단은 바로 언론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국정감사현장을 접하고 있어 언론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보다 더 선명한 모니터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II. 신문

이번 국정감사 신문보도는 여·야의 대립과 선정적 보도로 정작 감사내용에 대한 보도가 소홀했다. 또 38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이하 국감연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겨레만이 국감연대의 모니터보고서를 실는 등 차별성을 보였다.

조선일보 - 선정보도의 극치, '예비 총선보도'로 전략

국정 감사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양,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99.09.29 ~ 99.10.19



조선일보는 여야의 공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었고 충선을 의식한 기사가 많아 '예비총선보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감사 첫날인 9월 29일 자에서부터 조선은 <"정책감사" "실정폭로" 난타전 될 듯-15대 마지막 국감... 여야전략>(4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여야의 싸움과 국감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돋보이면 16대 예약"이라며 여·야 정당별, 각 상임위별 전략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사는 국정감사 중반이 지나도 여전했다. 10월 4일자와 11일자에서 각각 <국감장인가...유세장인가>, <"지역구 쟁전" 편찬에 "사회나 잘짜라" 급감위-국세청엔 공격 않고 굶신굶신>등의 기사 역시 마치 이번 국감이 여·야 정치인들의 총선 대리전인 듯한 의미를 주기도 했다. 특히 4일자 <국감장인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여의도만 시끄럽고 일반 국민들 관심은 냉담한 것 같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 발언과 실수만을 모아서 실수 투성이 감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는 고질적인 '정치불신 조장보도'로 비판받았다.

위의 기사처럼 아예 직접적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여야의 공방을 지나치게 확대한 기사 역시 불신을 조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0월 6일자 <홍석현씨 공방 "탈세는 국기사범"..."교묘한 언론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은 보광그룹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장의 공방전"을 다뤘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민회의의 입장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각각 다루면서 대칭으로 편집했다. 또 10월 9일자 5면 <'이총-홍총' 밀약설 여 제기에 야 발끈 국회일정 논의 파탄>이라는 기사 역시 이전투구식 공방기사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국회의원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를 비판하는 데만 앞장섰을 뿐 국정감사 보도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 중계보도 틀 벗지 못해 동아는 자사홍보성 보도 '염치없다'는 비판

동아일보는 9월 28일 <결치레 국감 안된다>라는 사설에서 "치밀한 준비속에, 부질없는 정치공방을 삼가고 정책을 따지며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실속 있는 감사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그동안 국정감사에 대해 지적되었던 '정치공방', '중복질의', '한견주의 폭로'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반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 스스로 '충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야 공방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10월 8일 <국감 맞닥대질>이란 사설을 실었고 10월 4일자 <국감장인가 유세장인가?>라는 기사에서는 충선을 앞둔 한견주의를 비판했다. 이 기사는 발언 실수 등 지역적 문제를 부각, 국정감사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자사홍보성 기사도 눈에 띄었다. 10월 5일자 <문광위 국감 속기록-언론탄압 논란>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사는 이훈평 의원 등 몇몇 여당위원의 발언중에 나오는 "과거 박정희(朴正熙)정권의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태 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편집을 방해하고 광고주를 협박했지만 동아일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세계와 국민으로부터 지원 받아 언론자유를 금자탑을 세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실었다. 74년 있었던 '동아일보 광고탄압'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은연중에 자사를 미화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동아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당시 해직된 기자들은 복직은 커녕 명예회복도 되지 못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한번도 사과한 바 없는 동아일보가 당시 의식 있는 기자들의 투쟁이 동아일보의 공인양 기사화하는 것은 염치없는 보도였다. 이밖에도 동아일보는 흥미성 보도가 많았다. 또 여·야 의

원이 낸 자료중심으로 보도했으나 이것이 '정책평가'로 한 발 나아가지 못하고 '중계보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일보 역시 여·야 대립을 중계방송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관광위 관련 보도 대부분이 '보광사태'에 대한 여야대립 기사였다. 또 정치면에 거의 매일 실리는 <말말말...>은 자칫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 기사는 "국세청 자진 신고는 라면박스가 받나..."(10월 7일자) 등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몇몇 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어를 기사화 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흥미위주로 흐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정감사를 차분하게 잘 다룬 기사도 있었다. 10월 8일자 4면에 보도된 <국감초점-골드뱅크, '의혹뱅크'로>라는 기사는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만 14억원의 적자를 낸 이 업체의 주가가 40여배 가까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등 「의혹의 배후」를 파고들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차분하게 평가했다.

객관성 상실한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국감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이었다. 중앙일보는 이미 보광그룹 탈세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 보도에서도 감사 내용보도는 소홀한 채 여전히 홍석현 사장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 자사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10월 7일자에서는 1면 머리기사와 4면기사에서 각각 <"홍사장 중앙일보 인수자금 출처 밝혀 보광 세무조사">, <안청장 표적조사 실토...지원들 "큰일났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모두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을 크게 인용한 것으로서 마치 '보

광사태'가 표적수사와 언론탄압인 듯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기사를 보면 안 국세청장은 "홍석현 사장이 보광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보광 또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를 인수했던 자금의 출처가 정당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내용은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을 위해 한 기업을 의도적으로 세무사찰 했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홍사장이 거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앙일보의 제목은 이런 점을 외면하고 자사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같은 날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의 잘못된 보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동아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을 인용, "보광탈세 독자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했다. 이후에도 중앙일보는 국정감사 관련 기사에서 유독 홍석현 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여 기사화하였다.

한겨레신문

시민단체 평가 적극적으로 활용, 감사내용에 대한 보도 가장 충실

위의 네 신문과 달리 한겨레신문은 국정감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편이었다. 또 [한겨레와 함께 하는 시민모니터]라는 기사를 통해 국감연대의 모니터 보고서를 기사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하루에 한 명씩 의원들의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진정한 정책감사의 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긍정평가다. 감사기간에 총 세 번의 사설을 실음으로써 다른 신문에 비해 관심 있는 자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9월 29일 <국정감사는 정책 중심으로>, 10월 2일 <재벌총수의 국감 불출석>,

10월 4일 <'시민국감' 박을 명분 없다> 등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논평했다는 평가다. 특히 9월 29일자 사설에서는 "국감장을 정치 공방 무대로 착각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주목할 점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개별 의원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 취지에 찬성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이러한 기대만큼 한겨레신문은 일반기사에서도 정책중심의 보도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평가다.

III. 총평 및 대안

이상 살펴본 결과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송뉴스는 사안을 중심의제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등 과거와 달리 분명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신문, 방송 모두 여전히 사실 나열적 공방보도나, 흥미성 스케치보도가 많았고 사안별 보도량에 있어서도 불균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긍정적 면을 평가하는데 인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국정감사에 대해 관심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루함과 냉소적 태도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직접 의정감시 활동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갈등이나 사건 위주로 기사화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의의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향후 있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사건보다 국정감사의 내용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람보다는 사안이 중심의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발적 사안이 돌출 되었을 경우 이를 흥미성으로 다루는데 그치지 말고 언론이 나서서 끝까지

추적 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사안별 고른 보도량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방보도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뉴스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수 국민들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명확한 근거와 분석 없는 '의원비판'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긍정적 면을 충분히 보여주도록 노력, 국민들의 무관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도 언론의 몫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이를 수행하는 의원들을 조명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국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감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수렴한다면 보다 좋은 국정감사 보도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정치적 해석으로 본질 흐려진 반인도적 범죄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의 재수사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해야하지만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보도내용도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여권의 정형근 죽이기, 그리고 89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의 내부갈등을 집중 부각한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보도는 어떠한 사안이든 정치적 잣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바라보기 일쑤였다. 이러한 보도관행을 이번에도 재연, 본질을 흐려했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가 지나치게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시각을 보인 것이 대표적. 조선일보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권력을 잡고 있는 측에 유리하게 결과 지어질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의 정치적 해석은 결국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과 공작정치의 실체여부에 대한 초점을 상실케 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재수사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DJ가 1만달러를 받았는데 노대통령에게 싹싹 빌어서 풀려났다"며 '빨치산수법'을 운운하는 발언에서 비롯되었고 여당이 정의원을 고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어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다'는 대통령의 심기를 알아차린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했고 1만달러 수수 거부를 입증할 2000달러 환전영수증과 정의원이 고문을 가했다는 안기부직원의 증언이 나오면서 사안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건 전개와 관련, 지난 3월 서경원씨등이 정의원을 고발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수사에 착수

제목 : 서경원 의원 사건 제조사 모니터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제조사 관련 모니터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이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수사가 조작과 고문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급기야 고문을 정당화하는 듯한 주장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조선일보 시대착오적 반공이데올로기가 사안의 본질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또 동아와 조선이 환전영수증 발견과 안기부직원의 고백내용을 축소보도한 것도 편파적 태도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중앙, '진상규명' 수사적 표현에 그쳐. 대한매일, '대통령 명예회복'에 초점 지나쳐

중앙일보는 11월 16일자 [이근안 박치원 그리고 고문]이라는 사설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관련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실상을 파악해 이땅에서 고문을 추방할 교훈으로 삼기위해...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역사의 장에 바로 기록할 수 있어야 고문의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신문도 이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재수사에 대한 일반기자들이 정치적 해석에만 몰입할 뿐 반인륜적 범죄인 고문이 쟁점으로 부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한겨레, 대한매일은 고문과 용공조작의 고리를 끊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담았다. 그러나 대한매일의 경우 <밀입북 재조사 '정형근 옥죄기' 아니다>(15일자), <1만불 수수설 허위자백 밝혀져>, <DJ 1만불 수수설은 유치한 조작>(17일자), <'드러나는 진실' 환전 물증 확보에 달려다>(1만불 수수설), <'과거들추기' 아닌 '물힌 진실캐기'>(재수사 청와대 시각)(18일자) 등 1만불 수수설에 집착, 자칫 'DJ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가 과다하고 검찰의 독립성이나 범리상의 문제를 외면, 집권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비인도적 범죄행위 규명에 초점 맞추어야

분단상황을 이용한 무책임하고 상습적인 폭로정치와 비인도적 고문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일보는 11월3일자에서 정형근의원에 대해 "폭로에는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에는 가장 후미에 서" 있다며 황장엽 망명사건 이후에 "황장엽리스트에 김대중 총재 주변인물이 포함돼 있다", "오익제씨 월북사건' 때도 김총재의 사전인 지설을 제기"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시도 안기부 수사국장으로 있었고 홍사덕의원 비방 유인물살포 및 기타 고문 관련 고발혐의도 받고 있다. 폭로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그리고 남북대치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불러왔던 정국경색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아왔으면서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언론에 대해 우리는 질책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형근 의원이 10여건의 고발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면책특권을 이용해 한번도 검찰 소환에 응한 적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세월이 흐른 뒤에 서경원 전의원 방북사건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고 재심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법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역시 대통령의 한풀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고문을 통한 용공조작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원칙 속에서 수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관련 보도 모니터 IV-2

부실경제



눈가리고 **아웅언론**

부실경제 사웅언론

- ▶ 경제전문매체 관련 보도
- ▶ 삼성자동차 범담론 관련 보도
- ▶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 보도
- ▶ 현대자동차 관련 보도



경제청문회 관련 보도
1월 19일 - 2월 1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지난 1월 18일부터 시작된 경제청문회가 그 한계를 점점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질의자들의 준비부족과 고압적 자세 그리고 증인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영삼 대통령 부자에 대한 출석까지 논란을 빚고 있어 경제위기의 책임을 가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작된 청문회이므로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재벌을 비롯한 경제위기의 주범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추후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제청문회에 대한 보도에서도 언론의 태도는 불성실하였다. 특히 언론이 경제 청문회를 정치권의 정쟁차원으로 치부하는 행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런 식의 보도 태도는 실제 청문회가 미흡함을 감안하더라도, 위기의 본질과 책임을 규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사실 IMF 환란의 책임에서 언론은 자유롭지 못하

다. 당시 언론은 '위기 없다' 식의 기사를 주로 내보냈는데 이는 특히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졌다. 조선일보는 97년 9월 11일자에서 "한국 외환위기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주한외국 금융기관장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또 97년 3월 8일과 9월 18일에는 모두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IMF 캄드쉬 인터뷰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 경제청문회 보도에서도 본질을 흐리는 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진상규명은커녕 '표적 청문회'를 운운하며 비리책임자인 전 정권과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IMF 위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책임이 무거운 조선일보가 그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까지도 '몰타기'에 여념 없는 태도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본회 모니터팀에서는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4개 일간지를 모니터 한 결과 조선일보의 보도가 가

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나머지 3개 일간지들과 별도로 정리하였다.

조선일보

환란 책임 있는 조선일보 - YS 감싸기, 표적청문회 주장으로 경제청문회 마저 본질 흐려

조선일보는 보도첫날인 19일자부터 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날 4면 최영목 기자에 의해 작성된 <한계 드러낸 '한 목소리' 청문회>에서는 "전 정권의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질문이었고,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며 "주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라는 목표를 위해 단독 청문회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한계 드러낸'이라고 단정한 것은 애초 청문회 개최를 원하지 않았거나 청문회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는 '단독청문회'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 한나라당의 입장을 강조했던 조선일보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조선은 <"네 번씩이나 ... "YS 화났다 청문회 출석요구에 "해보자는 거나" 격문>이라는 기사도 실었다. 이 기사는 "『5공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 차례 출석했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을 네 번씩이나 끌어내려는 자체가 정치 보복적 의도라는 주장이었다"며 김 전 대통령측의 입장을 충실히 실고 있다. 이것은 비록 사실전달이지만 '사실 보도'라는 미명하에 상도동계의 입장을 비중 있게 전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같은 날 6면 국회의원회 지도부 합숙토론회 기사 제목인 <"YS 청문회 소환 말라" 주장도>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1월 22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3면에서 조선일보는 또 다시 <YS 겨냥하는 경제청문

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표적청문회'라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특히 <"92년 한보서 수백억..." 뚜렷한 근거 제시 못해>라는 제목으로 '근거 없는' 을 강조, 결국 김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1월 23일 3면 머리기사의 <YS 부자 끝내 청문회 세울까>라는 제목에서도 여권이 'YS 부자'를 억지로 불러들인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끝내'라든가 '세울까'라는 표현이 그렇다. 또한 <"잇단 폭로 ... 비리 파헤치려 작심" 추측도>라는 작은 제목에서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마치 정치적 '보복'에서 비롯된 듯한 느낌을 전

YS 겨냥하는 경제청문회

92년 1월 19일 - 2월 1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25일 이후 한두전 터질 것

92년 1월 19일 - 2월 1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92년 1월 19일 - 2월 1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하고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표적 청문회' 운운하며 청문회 의미 퇴색하기

조선일보가 이번 청문회를 애초부터 폄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드러난 기사는 보도첫날인 19일자 7면 <여야 '529 해결' '청문회' 빅딜 하나>라는 기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 드러난 대로 청문회를 '국가부도 사태를 유발한 책임 규명'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

협상용' 소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청문회 기간 내내 이어졌다. 1월 20일 기자수첩(김창균 기자)은 <표적청문회>라는 제목으로 마치 여당이 야당의 뿌리인 전 정권에 대해 '표적' 청문회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였다.

이어 같은 날 사실인 <표적청문회 안돼야>에서도 조선은 "설령 공동청문회가 이루어진다 해도 여야가 청문회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룬다든지, 정치 보복이나 뒤집어씌우기, 표적청문회 형태로 몰아가는 것도 청문회의 의미를 상실케 만든다"며 우회적 표현으로 야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 "내실있는 정책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나 편견, 정치적 동기 등에 따라 표적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책청문회의 생산성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인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미심장한' 주장을 폈다. 매우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재벌이 증인에 서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김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거론되

는 시점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논조이다.

동정심 유발로 한나라당 편들기

한편 같은 날 조선일보 6면을 펼쳐들면 돋보이는 것이 편집의 묘미이다. <"빛나간 질문 ... 면피성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단독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은 기사가 있고, 그 오른쪽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부인대회' 기사가 있다. <"이제 '야당식 내조' 잘합시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야당이 된 뒤 매일 매일을 전투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울지 말자, 꾀갯하자...", "눈물을 쏟았던 권오을 의원 부인 배영숙씨는 '엄동철 한에도 행사 때면 문 밖에서 몸이 언 채 손님을 맞았다'며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몇몇한 야당부인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이 기사는 낮이 붉어질 만큼 '유치한' 내용이어서 혹 동정심 유발을 위한 기사였다고 해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 당신이군">이라는 캡션 제목으로 이회창 총재와 부인이 만나는 장면을 상단에 사진기사로 크게 처리하는 편집 등은 기사도 그렇지만 지면낭비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1월 23일자 6면에도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광옥 씨 인터뷰가 실렸다. <"낙선 때도 눈물 안보였는데 동생 구속되고 무척 울었대요">라는 큰 제목에 이어 '이회창 총재 정치입문 3년 ...'이라는 작은 문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태도와 관련, 특별한 이슈 없이 한 정당의 대표 부인까지 중앙일간지에 '미화'되는 기사가 왜 실려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기사로 지면을 낭비한 것은 여권의 단독 청문회와 야당의 장외투쟁 정국에서 교묘하게 한나라당, 특히 이회창 총재의 편을 옹호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비판이 있었다.

첫날부터 단독청문회의 '한계'를 강조했던 조선일보는 1월 27일자 사실 <"나는 몰랐다" ?>에서 "정치적 이해나 편견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인적 대상을 상대로 일방적인 책임 씌우기에 치중하는 것은 표적 청문회 또는 인적 청문회로 흐르게 할 소지가 많다"며 다시 한번 '표적 청문회'를 언급하였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의환위기 확산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지적능력과 관리능력의 한계를 반증할 뿐이다", "당시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이니 감싸주고 야당이니 몰아붙인다는 사회 일각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고 주장했다. 이는 전면 그른 주장은 아니지만 차칫 경제위기의 책임소재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가 전 정권의 과오를 직·간접적으로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동아, 중앙, 한겨레

청문회 취지 외면한 보도

경제청문회가 보도되기 시작한 1월 18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단독청문회 유감>, <청문회 여야가 함께 해야>라는 사실에서 단독청문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신문 모두 한나라당이 제시한 참여조건 세 가지 중 여야 동수 특위구성은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이며 나머지 2개항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아일보는 "여당이 공동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과거 비리를 캐겠다는 언급은 청문회 거부 구실을 강화시킬 뿐이다"라고 하여 단독 청문회의 책임을 여당에게 더욱 많이 묻고 있다. 그렇지만 동아일보는 단독청문회의 한계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번 청문회의 방향이나 의

의에 대해서도 제시했어야 하였다. 반면 한겨레는 같은 날 4면에서 <반쪽청문회-여야 모두 부담>이라고 하여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내용보다 분위기에 치중

한편 논리적이지 않은 강압적인 태도로 증언을 받아내는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한 기사들이 많았다. 동아와 중앙은 19일자에서 각각 <"재경원 감싼다" 재경부 혼쭐, '이장관 소극답변에 증인 신문하듯 성토'>, <의원들 "재경부 책임회피" 호된 질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물론 의원들의 태도는 당연히 비판받을 만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보다 특위위원들의 태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도한 것은, 내용보다 분위기 전달에 충실한 '현상중심보도'였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특위위원들의 태도 비판에 중점을 두으로써 여권의 단독청문회가 정치 보복성 청문회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표적청문회'로 몰아가는 태도 비판받아

중앙일보는 1월20일 <김영희 대기자의 투데이>에서 "여당의원끼리 둘러앉아 주눅이 들어 있는 증인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거를 의식한 정치쇼를 벌이고 한 두명의 청문회 스타나 배출하자는 것인가"라며 단독청문회에 대해 강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청문회의 원인은 여당에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경제를 망쳐놓고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우선 비판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문회 스타나 배출하자는 것인가'라며 여당에 책임을 지우는 태도는 '국가부도 사태'의 진상규명이라는 청문회의 의의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동아일보 역시 1월19일 <'與단독청문회 공정성 의문-57.2%'>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

社說

표적청문회 안돼야

여당만이 짊어지고 있는 경제청문회는 첫날부터 반쪽청문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 1년만에 여당사리 경제청문회를 열었다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른 관련 기관과 공직자, 관련 민간인들이 청문회의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여 일관 결심과 값진 교훈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무엇보다도 의환위기의 진정과 뿌리를 밝히려고 그에 대한 정확히 대응과정이 시의성과 합목적성, 현신 회한적 대응 기질을 얻는지 엄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타진 IMF체제하의 경제위기에 대해 그간의 대응과정이 과연 어떠한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역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정책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김 대통령도 '목적의식'을 갖고 사태를 호도하거나 과정에서 안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직은 갈루안하지만 만약 여야가 공동청문회에 합의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요 정책분야별 이슈로 정당한 이슈 선정하고 전문화하여 구체적인 당시 상황, 전-재(政-界)의 대응 등에 대한 상황비교와 문제점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선 관계 기관의 기초자료도 정확히 제공해야 하지만 청문과정도 중무경으로 자라 왔는 식의 방어우기기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참여위원들의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청문회에 임하는 관련 기관들도 책임의식 소각지세보다는 의환위기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지 않으려는 사명감으로 사실규명에 진지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 내실있는 정책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나 편견, 정치적 동기 등에 따라 표적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정책청문회의 생산성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인을 불필요하게 많이 소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여당의 단독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 1월 23일 4면 머리기사에서는 <“경제청문회 與 ‘폭로파일’ 뭐가 들어있나”>라고 하여 정치보복성 폭로청문회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상 동아, 중앙일보 모두 청문회의 공정성을 의문시하면서 경제정책상의 비리를 밝히는 것을 ‘정책청문회’로 보고있지 않다. 오히려 ‘폭로청문회’, ‘표적청문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개혁의 교훈을 얻기 위한 이번 청문회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비록 단독청문회라도 경제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권의 비리와 얽혀 있으므로 이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겨레의 주장은 눈 여겨 볼만하다. 한겨레는 1월 19일자 사설 <온전한 경제청문회들>에서 “정경유착 등에 따른 비리혐의가 잡히면 엄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라며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처벌까지 주장했다. 이어 “당리당략을 떠나 진지한 자세로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쪽 청문회의 한계를 앞세워 여당에 책임을 지우며 청문회 무용론까지 내세우는 일부 신문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청문회의 의의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야 정쟁의 ‘도구’로 돌아가기

중앙일보는 1월 25일 3면에서 <떨어지는 공동청문회>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은) 단독 청문회로 진행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김 전대통령을 돕는 것이란 판단이다. 여당이 구인절차라도 밟는다면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게 돼 한나라당으로선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공동청문회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한나라당 입장을

그대로 실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고질적인 ‘지역감정’까지 동원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동아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증인출석에 대해 1면에 계속 보도(1.23 /1.25 /1.27-YS 증인출석 대신 與 간접증언 검토)하며 특히 김 전대통령의 증인출석문제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또 1월 23일 4면에서 <상도동은 지금 “폭발직전”, DJ비자금설 막아준 게 누군데... 비리의혹 잇단 제기에 강한 불쾌감>이라며 상도동의 불쾌함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중앙일보 역시 같은 날 3면에서 ‘상도동, 마녀사냥 격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청문회를 정치인들의 힘 겨루기 수단으로 치부한 것으로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도 김영삼 대통령 등 몇몇 책임자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YS와 재벌의 책임 외면

한겨레는 1월 22일 3면 <한보-YS 정권 거래의혹 부각/ 92년 대선 YS쪽에 수 백억 뒷돈>이라는 기사에서 청문회에서 밝혀진 쟁점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책임론을 다시 거론하면서 정경유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후에도 한겨레는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지는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하면서 김 전 대통령을 제목에 자주 거론하여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1.23, 1면-PCS사업자 선정 YS개입)(1.27.1면-윤증현 옛 재경원 실장 “부도유예협약은 YS 강력 지시)(1.28 1면-YS, 기아 부도처리 막아)

한겨레는 김영삼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벌의 책임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재벌총수 증인대 세우라는 시민단체의 의견기사(1.23‘시민의 눈’)와 ‘재벌 외채 많아 IMF초래’(1.27.1면 머리), ‘재벌 부도로 부실채권 증가 결국 국가부도’(같은 날 3면)등의 재

벌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였다. 또 1월 19일자 사설 <온전한 경제청문회를>에서도 “청문회 증인선정은 아무리 뜯어봐도 문제가 많다. 왜 환란의 주범인 재벌총수들은 대상에서 빠졌는가. 감옥에 간 정태수 씨를 제외하면 총수들은 증인은커녕 참고인으로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1월 27일자 청문회 시민감시단의 관계자의 “강 전부총리의 발언은 재벌 문제가 의제에서 빠진 이번 청문회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반면 동아와 중앙은 재벌책임론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동아는 1월 27일 1면에서 <강경식씨- 환란은 재벌 차입경영 탓 주장>이라는 큰 제목으로 강씨의 증언을 인용하였을 뿐 재벌의 책임이나 재벌총수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재벌언론’ 중앙일보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중앙일보는 1월27일 1면에서 <부도유예협약 YS가 지시>라고 한 반면 강경식씨가 말한 재벌 책임론에 대해서는 4면 증인의 증언에서 몇 줄로 한차례 언급할 뿐이었다. 이어 28일자에서도 환란의 책임을 모두 김 전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였다. 1면과 4면에서 각각 <기아 부도처리 YS가 반대>, <환란 전후 YS경제인식 “치명적 결함”>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또 지금까지의 보도태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김 전대통령의 증언 필요성을 제기하는 박스기사도 눈에 띄었다. 이 기사에서는 부도유예협약과 기아사태 처리지연이 모두 김 전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환란의 책임을 김 전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는 강 전 부총리의 증언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일보가 재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김 전대통령의 책임만 유독 강조한 것은 재벌의 책임을 은폐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삼성 보도 외면한 중앙일보

삼성자동차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자원부 보고 이후인 1월 22일이었다. 한겨레는 23일자 1면에서 <‘삼성차 부적절’ 정부 보고서 파기>라는 제목으로 옛 상공자원부가 지난 94년 12월초 삼성그룹의 승용차 신규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 등 정부 공식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삼성자동차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 캐기에 열중하였다.

반면 동아는 같은 날 1면 제목에서부터 <어제 산자부 보고 삼성자동차문제 거론자체>라고 하면서 삼성차 문제의 본질을 피한 보도가 중심이 되었다. 또 4면에서는 <부 지역감정 악화우려 삼성차 문제 변죽만 울려>라며 자민련 박태준 총재의 요청에 따라 특위위원들이 삼성차의 부산유치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입을 닫고 대신 전반적인 중북투자문제만 다루었다는 보도를 하였다. 결국 동아는 삼성차 인허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산자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지역감정 때문에 거론을 못했다’는 실속 없는 기사만 내보낸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삼성차에 대한 산자부 보고내용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고 3면에서 <기아 국민기업론은 잘못>이라면서 삼성자동차 음모설을 피해갔다.

이와 같이 삼성에 대한 각 신문의 다른 입장은 김 선홍 전 기아회장의 증언을 다룬 1월29일 보도에서도 드러났다. 한겨레는 이날 ‘부실경영 추궁에 “삼성음모” 맞서’라는 제목으로 기아 부도 사태이후 채권단이 경영권 포기를 요구했음에도 김 전 회장이 ‘삼성의 기아 인수 음모설’을 퍼뜨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고 있다. 동아도 ‘삼성음모론 꺼내자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4면, ‘청문회 이모저모’)라고 하여 김 전 회장의 입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은 삼성음모설은 어불성설이라는 몇 줄 짜리 기사만 실고 있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내용조차 자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면에서 누락시킨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문회에 대한 김백기 식 보도

동아일보는 1월 29일자 <그 질문에 그 답변>이라는 사실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2월 1일자 5면에서 <증인들 발뺌에 속수무책, 열기 식어 중복 질문 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에서 '설(說)'만 난무하고 운영에서 미숙함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면서 지난 청문회 일주일 동안 중간 결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실 이번 청문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숙하였다. 그러나 그 핵심은 재벌과 김 전대통령, 김현철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이며 여기에 의원들의 준비부족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자칫 청문회 무용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중앙일보 1월 29일자 김정수 전문기자 리포트에서 주장하는 대로 '청문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책임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여권이 져야 한다'며 여당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위기의 주요책임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재벌, 한나라당 등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은폐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겨레 1월 28일자 사실 <청문회 이제라도 제대로 하자>에서 "경제청문회가 증반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특히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재벌책임론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내린 종합적인 중간평가는 적절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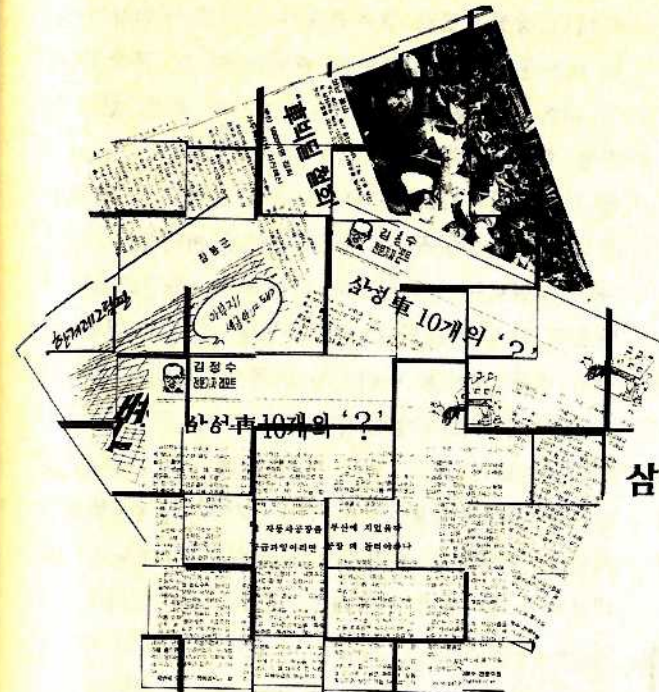
2. 시민단체 청문회 감시단에 대한 보도 미흡

한겨레는 1월 20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청문회 감시활동에 나선 것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꾸준히 시민단체의 청문회 모니터 내용을 충실히 기사화 했다. 특히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예: 대질신문)과 '재벌총수 증언대 세워라'(1.23.'시민의 눈')는 주장까지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동아는 시민단체들이 청문회 모니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한번 보도됐을 뿐 이후 후속기사가 없었고, 중앙 역시 1월 25일 참여연대의 모니터평가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반쪽청문회의 한계성만을 지적했을 뿐이어서 다각적인 평가가 인용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조선일보 월22일 만평



삼성자동차 빅딜 관련보도니터 6월30일-7월8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경향, 대한매일

삼성차 처리, 말뿐인 '경제논리'

중앙,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 동아, 지역정서 부추기기 앞장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최근 법정관리 신청으로 비롯된 삼성자동차 처리에 관한 우리 언론들의 주장은 이렇듯 한결같다. 2년 전 기아자동차의 '재탕'을 우려하면서 지역민심 등을 고려한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경제논리에 따라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이견회 회장의 사재출연으로 시작된 삼성차 처리 과정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 역시 2년 전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독립'을 천명한 중앙일보는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로 여전한 '재벌신문'의 굴레를 드러냈고, 동아는 감정적인 '부산민심' 보도로 지역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언론' 중앙일보의 허상 드러나...삼성 이회장 부자 탈세의혹 축소보도 일관

<거액사재 내용은 '결자해지'>, <생보사 상장

生保社 上 장 '10년 숙원' 풀리나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Shinil Life Insurance, including columns for '종류', '비율', and '금액'.

생원회 회장 사재 출연 등 오보성행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결자해지'가 실현될 수 없게 됐다. 이회장은 '결자해지'가 실현될 수 없게 됐다. 이회장은 '결자해지'가 실현될 수 없게 됐다. 이회장은 '결자해지'가 실현될 수 없게 됐다.

‘10년숙원’ 풀리나>... 삼성차 부채 청산을 위 해 삼성그룹 이회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내놓은 것 을 두고 중앙일보(7월1일자)가 단 제목이다. 같은 날 사설 <삼성차 처리와 이회희장의 결단>에서도 “주식 회사에서 주주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주주건 소주 주건 자기 소유주식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법”이 라며 “이회희장의 결정은...소송적 이해를 뛰어넘은 결 자해지(結者解之)의 용단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 다”며 잔뜩 추켜세웠다. 이는 같은 날 다른 신문들 이 <삼성의 계산, ‘부실 차’ 털고 ‘황금거위’ 얻는다> (조선, 5면), <삼성생명 상장 싸고 논란, 주주 몫이나 보험계약자 몫이나>(한겨레, 경제면) 등 ‘삼성생명 상장 이득’이라는 부정적 이면을 강조한 다른 신문 들과 대조를 이룬다.



성남 풀산. 부산 속이기, 속기 음모... 7월 10일 부산 동구 용동에서 열린 ‘강력하게’ 관련... 100만인 시위를 열었다. 부산 시민들이 우물을 파고 등... 100만인 시위를 열었다.

“후빅딜 철회... 피해 보상하라”

부산 5000여명 집회 가두살피며 자진배상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협회와 삼성생명 삼성생명지주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7월 10일 부산 동구 용동에서 ‘강력하게’ 관련... 100만인 시위를 열었다. 부산 시민들이 우물을 파고 등... 100만인 시위를 열었다.

이런 양상은 5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회희장과 아 들 이재용씨의 삼성생명주 변칙 증여 및 탈세 의혹 에 대한 축소보도로 이어진다. 6일자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대한매일 등 대부분의 신문들은 이 사건 을 1면 머릿기사로 뽑거나 다음날 사설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비중있게 처리했다. 그러 나 중앙일보는 동아일보와 더불어 이 사건을 1면 2 단으로 작게 처리하고 대신 국회의 삼성차 관련 대 정부 질문 기사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물론 후속기 사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앙일보는 최근 자사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 광그룹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 특별취 제팀을 구성하고 관련기사를 연일 1면 머릿기사로 내보내는 등 지면 사유화의 전형을 보여줬다. 결국 이 두 가지 사례는 ‘모기업’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 는 ‘독립언론’ 중앙일보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했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말뿐인 경제논리

7일 부산에서 삼성차 청산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 어지는 등 부산지역민심이 삼성차 처리의 변수로 떠 올랐다. 이에 모든 신문들은 삼성차 처리가 자칫 정 치논리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경제논리로 풀 것 을 주문했다. 그러나 집회 보도면에서 일부 신문들 은 감성적인 보도태도로 일관, 지역민심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에 대한 반발은 축소한 채 집회의 성격을 정부에 대한 반발 로 몰아갔다. 중앙일보는 8일 <반빅딜서 반정부로... ‘삼성차 민심’ 급발진>, <들끓는 부산...속끓는 여야 >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다는 한편 김영삼 전 대통 령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부산죽이기 목과못해”>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등 삼성차 처리를 ‘부산죽이 기’로 몰고 갔다. 또한 ‘삼성차 정상화’ 등 삼성차측 에 유리한 주장만을 강조해 지역민심을 호도하는 경 향도 눈에 띄었다.

동아일보 역시 1면 머릿기사 제목으로 <“차빅딜 철회...피해 보상하라”>는 주최측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3면 <부산경제의 현주소;수산-차 등 중 심산업 흔들려 침체>라는 기사를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신문 내용 중, 정작 부산집회에서 주장하는 ‘삼성차 정상화’의 문제 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찾아보 기 힘들었다. 이에 비해 다른 신문들은 집회를 비교 적 차분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한겨레의 경우 <각계 진단; “만들수록 손해” 청산론에 무게>, <부산 살리 기 현실적 대안 있나> 등 ‘부산 살리기’의 허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였다.

삼성 자동차 빅딜 관련보도 2차 모니터 보고서

6월30일~7월13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

알맹이 없는 ‘경제논리’만 되풀이...정책 혼선 빛고 우왕좌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면 우리 언론들은 ‘경제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IMF구제 금융 이후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돼 노사정 문제부 터 정리하고, 빅딜,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특하면 ‘경제논리’나 ‘시장원리’가 만병통치약처럼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아직 ‘경제논리’가 서투른 우리 언론의 모습은 ‘보도’를 휘두른다기보다 휘둘리는 것에 가까 워 보인다.

이번 삼성차 처리 과정에서도 모든 언론들은 한 결같이 ‘경제논리’에 따른 해결을 외쳤다. 그러나 정 작 삼성차 공장 청산문제, 삼성생명 상장문제, 부산 지역 경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속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흐름과 현상만 쫓아가는 언

언론, 대안이 없다

삼성차 처리에 관한 언론보도를 볼 때, IMF 구 제금융 직전이나 별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우 왕좌왕하는 정부정책에 비견할 만큼 언론 보도 역 시 혼란스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모 두가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없이 현상보 도에만 급급한 경제관련 보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 여준 것이라 하겠다.

론의 보도는 결국 정책혼선만 불러왔다. 결국 대안 없는 언론의 ‘경제논리’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왕좌왕하는 정부 뒤엔 원칙없는 언론

각 신문들은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삼성차 처 리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정책혼선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건 각 신문 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양상은 부산집회를 보도하 면서 분명히 드러났다.

7일 부산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삼성차 문제가 자 칫 지역감정의 문제로 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제2의 기아차 사 태’를 우려하며 삼성차 문제를 ‘경제논리’에 입각해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

<원칙없는 변칙 꼬이는 삼성차 해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국민회의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한편 지역정서를 이용하려는 야당을 삼성차 허가의 원칙을 들어 비판한다. 또한 부산집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보도하면서 주최측의 삼성차 비판 부분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9일자 사설 <정부는 삼성차에 개입말라>에서 “정부개입 자체가 문제를 정치적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조정자 입장에 머물 것을 주문한다. 경향신문 역시 9일자 사설 <삼성차 빨리 수습하라>에서 “삼성차 문제를 혼란에 빠뜨린 1차적 책임은 원칙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에 있다”며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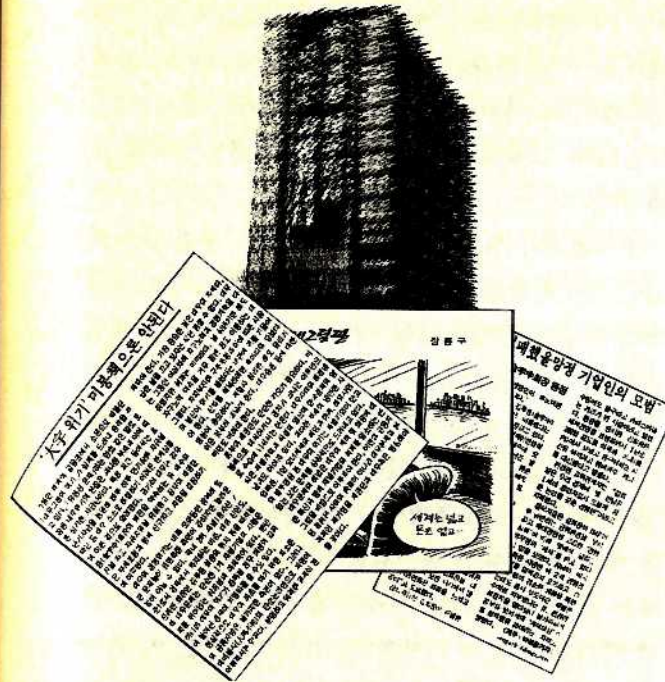
맹목적인 경제논리 자제해야

그러나 ‘경제논리’를 목청껏 외치는 이들의 주장 속에는 이미 부산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전체

◆삼성차 관련 신문보도 일지

주요 일지	신문 주장(다음날 조건)
6월30일 (수) 삼성차 법정관리신청 및 이회창 회장 사제 출연 발표 이현재 금감위원장, 생명주 연내상장 검토	생명주 상장 특혜 논란 제기(조선, 한겨레 등)
7월1일 (목) 이 금감위원장, 상장 유보 시사 삼성, 생명주 상장 2001년까지 연기 밝혀 부산경남시민단체, 삼성차 법정관리 반발	
7월2일 (금) 김대통령, 삼성차 공장 계속 가동 밝혀	
7월3일 (토) 이금감위원장, “삼성차와 생명 상장 별개”	이회창회장 생명주 변칙상장 의혹 제기
7월5일 (월) 강봉균 재정부장관, 이회창 추가 사제출연 제기 삼성, 추가 사제출연 불가 입장 밝혀	삼성차 원점회귀, 정부정책 혼선 비판
7월6일 (화) 참여연대, 이회창 부자 변칙증여 및 탈세 의혹 제기 국제정·공정위, 삼성생명주 변칙 증여의혹 조사 착수	이회창 부자 변칙증여·탈세의혹 철저 규명 촉구 (조선,한겨레,한국,경향,대한매일)
7월7일 (수) 김대통령, “삼성차 문제 삼성이 해결” 삼성, 추가출연 불가 발표 부산집회, 삼성차 정상가동 요구	삼성차문제, 경제논리로 풀어야
7월8일 (목) 삼성, 사제출연 부족분 그룹에서 해결하기로 정부, 생명주 조기상장 허용 및 부산공장 재가동하기로	삼성차 이회창이 책임져야(조선) 경제논리로 조속히 해결(동아,중앙,경향)

의 파탄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여론, 즉 정치논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정 올바른 경제논리는 정치논리를 압도할만한 훌륭한 대안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맹목적인 ‘경제논리’ 역시 정치논리 못지 않게 경제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관련보도
99년 7월27일~8월3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

대우 그룹에 너그러운 언론,
재벌비판은 구호에 그쳐

‘창업신화’ 대우그룹이 위기를 맞았다. 그 동안 대우는 수출에 주력, 국내의 금융을 바탕으로 계열사를 크게 늘려왔고, 그로 인해 재무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끊임없이 위기설이 나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대우그룹 위기 사태는 단순히 한 재벌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또 지지부진하게 끌여온 재벌개혁이 더 이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7월 20일자 몇몇 신문의 사설은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해주었다.

경향신문은 “과다한 부채와 방만한 사업확장, 1인 오너체제의 책임과 한계, 해외사업의 불투명성 등 대우의 위기는 재벌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역시 “다른 재벌들도 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확장 경영과 구조조정 지연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대우그

‘大宇 위기’ 미봉책으로 안된다

그동안 재계의 금융권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대우그룹의 위기’가 실체를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동성 문제’라는 안흔 같은 말로 포장된 대우위기의 본질은 과다한 부채와 이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초난기자금을 동원해 하루 하루 만기상환 자금을 막는 등 대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대우는 김우중(金宇中)회장의 퇴진을 약속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정부와 재계간은 무채조정과 함께 신규자금 지원도 검토하게 이르렀다.

대우의 경영위기는 내륙 오랫동안 잠적해 있던 문제들이 표면화한 측면이 강하지만 늘려온 수입이 아예 없다. 국내 2위 재벌(총자산/순이익)로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외 신인도, 인력면 외장인 김우중 회장의 위치 등을 따져볼 때 대우문제는 단순한 1개 재벌기업의 사들인 채를 뛰어넘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우의 위기가 증폭될 경우 외생의 김과 더불어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우의 최초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우불사(大宇不死)의 단언논리만으로 지연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분명하고 엄격한 공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의 지체, 답답한 발을 끄고 보자는 식은 통찰 수 없다. 대우는 그동안 여러차례 지구조조와 경영개혁을 다짐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골 샐만기만 해도 지구노력 약속을 겨우 절반 정도 이행하는 데 그쳤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시장 의 불신이 위기를 불렀다는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패를 회복하려면 배아의 밑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계열사 임직원들도 팔라기 쉬운 것부터 내놓아야 한다. 대우증권 등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한다.

정부의 재계간도 단단한 가교가 필요하다. 미봉책으로 대처하거나 경치가 크다는 아무나로 수습에 나서서는 안된다. 대우사태의 해결방식은 재벌개혁과 직결되어 있으며 한국경제의 앞날과도 이어져 있다. 과다한 부채와 방만한 사업확장, 1인 오너체제의 책임과 한계, 해외사업의 불투명성 등 대우의 위기는 재벌기업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우문제의 해법은 대우의 개혁 및 최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재벌기업의 개혁을 앞서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금융지원 검토도 사태의 촉진이 아니라 대우부채의 본격적인 재계간을 재계간과 대우측은 협동해야 할 것이다.

룹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할 것이다"라며 재벌들의 구조조정 부진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본질적으로 IMF 체제 이후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재벌체제의 폐단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더 이상 국민경제가 재벌들에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 역시 사실에서 "대우사태의 표면화는 무엇보다도 환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대우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앞서 선부를 환란 극복 선언이 얼마나 성급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우선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여전히 재정자금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4조원은 곧 세금"이라고 한 것은 대우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혈세'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잠시, 대부분의 보도가 재벌구조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쯤으로 '평가절하'하거나 '대우살리기'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이어졌다.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신문이 있는가하면 대우와 김우중 회장에게 너그러운 시각도 있었다.

'국민경제 살리기'인가 '대우살리기'인가

한국일보는 재벌과 정부비판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진 사실에서 한국일보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26일자 사실에서는 "대우처리를 재벌개혁 차원에서 엄정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우그룹의 해체」라든가 「김회장의 퇴진」 식으로 시장을 향해 미리 공포탄을 쏘아댈 이유는 없다. ... 필요이상으로 충격을 키워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27일자 사실에서는 "IMF체제 진입후 투명성 제고를 그렇게 강조해 온 정부와 재벌은 가장 큰 문제점을 숨기고 있었고, 마침내 환부가 풀아터지는 지경이 되어야야 실상을 밝혀 결국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하면

서 '공포탄을 쏘아댈 이유가 없다'거나 '충격을 키워서는 곤란하다'는 강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대우그룹과 김회장이자.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는 평소 한 국일보가 그렇게 주장했던 재벌개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정부비판에 강도를 높인 반면 대한매일은 정부대책을 주요기사로 다루며 이를 해설 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7월 22일자 사실에서 대한매일은 "정부가 대우그룹을 지원키로 한 것은 대우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 신인도를 감안한 것이다."고 쓰고 있다. 7월 24일자 사실에서도 "정부가 대우 구조조정에 직접 강도높게 개입한 것은 이 그룹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시종일관 정부정책 부각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것은 대한매일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대한매일에서 재벌개혁을 강조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7월 27일자 사실은 "재벌개혁부진의 결과가 국가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벌기업들은 국가경제의 명운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우사태를 계기로 개혁조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선언적으로만 들리는 것은 바로 정부 입장 나열에 여념없는 대부분의 기사들 때문일 것이다.

경향신문은 흥미성 기사가 많았다. 7월 21일자 2면에서는 <대우-삼성 깊어지는 '감정의 골'>이라는 제목으로 [삼성버티기 일관에 빅딜협상 무산됐다] (대우의 반감) - "차·전자빌딩 불모로 한몫 챙기려고 했다"(삼성측 입장)는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날(22일)에도 <김회장 사재' 옥신각신/ 정부-대우>, <대우지원금 분담 '채권단 신정전'> 등의 기사가 실

렸다. 이들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는 대우사태의 본질과 향후 대책마련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경향과 동아는 22일자에서 각각 <"재계, 화해·협력의 큰길로"/김우중회장, 전경련 세미나서 강조 눈길>, <김우중회장 「재계 화합—공존해야」...전경련 세미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김회장의 발언은 위기에 처한 재벌총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의미 있게 다룬 언론의 태도는 대우사태의 책임당사자인 김우중 회장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로 비쳐졌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실패했을망정 기업인의 모범 / '실패한 경영인이 부도덕한 경영인은 아니다.'>(7/23), <전경련 회장단 「김우중 위로모임」...대우돕기 협력단>(7/30) 등 미화성 기사도 실었다.

"실패했을망정 기업인의 모범"

재계 김우중회장 통정

"실패한 경영인이 부도덕한 경영인은 아니다."

대우회장이 김우중(金宇中) 회장의 심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자리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경림 회장을 위해 재우에 모인 재계인사들은 30여년간 쌓아올린 '김우중 신화'가 한순간 '실패한 경영인'으로 매도되는 데 대해 감회 울분을 토출했다.

박정구(朴定求) 금호보장은 "가 봐라 해도 우리경제의 수석드라이버를 선도했던 사람은 김회장"이라며 "우승입국에 기여한 그의 30여년이 한순간에 매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또다른 경영인은 "실패 실패한 경영인이 되더라도 김회장의 열정은 감동"이라며 "김회장님 대하는 정부의 모진 시각에서 많은 기업인들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삼성지금은 김회장이 재벌총수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중시한 김회장은 세계경영을 표방하면서 1년은 200일 정도를 외국과 국내(國內)에서 보내고 중국에서는 시간을 아끼려고 뽀빠리까지 몰고 다녔다고 말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김회장은 우리 경제에 몇 년남은 1세대 창업자로서 드물게 과한 논리를 갖춘 경영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김회장이 IMF이후 급변하는 국외환경을 무시하고 최대경영철로 고집한 '경외 철학'에 비해 말년에 말리는 유무형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남이 미국 유학을 사방한 뒤 2세 경영권 승계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소신했 없이 김소현 생황을 해왔는데도 회사 부도덕한 재벌총수처럼 치부했다는 것. 전경련 회장직을 맡다보니 불가피하게 정부와 맞서게 된 '개머데탕'으로 정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재우=박정구기자> wogark@donga.com

이상 대우사태와 관련, 모순된 해법(한국), 흥미성 보도(경향), 내각제 보도에 밀린 축소보도(조선, 경향) 등의 언론보도는 초기의 재벌비판 시각을 무색하게 했다. 2년 전 외환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위기 없다' 류의 기사를 심는데 급급했던 언론의 모습에서 질적으로 발전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대전자 주가 조작 관련 보도
 경향, 대한매일, 동아, 문화,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시장논리 이증갓대로 '자기모순'에 빠진 언론
 - 정치논리로 본질흐리기, 재벌 보호하기 급급

지난 4월 금감위에 의해 적발되어 현재 검찰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 재벌의 치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시장논리, 경제 논리를 주장하던 재벌이 바로 그 시장의 질서를 흐트러 놓은 것은 한국재벌의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인하는 기본적인 문제 이상의 폐해를 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사문제, 정리해고 등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경제논리를 강조하고 나섰던 언론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문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재벌압박으로 해석, 사태를 왜곡하고 심지어 '몰아치기 수사는 위험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 재벌 보호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이 항상 주장해왔던 '자유시

장' 법칙을 재벌스스로 어겼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신문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대체로 축소 보도되었다. 초기에 몇 개의 신문이 주가조작과 정씨 일가와 관련된성을 조심스럽게 기사화 했지만 이익치 회장의 소환, 구속 과정에서 대다수의 신문들은 이회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현대 길들이기", 정치논리에 의한 강압 수사 등 파위게임식으로 해석하는 보도 역시 본질을 흐리는 데 일조했다.

'어른몰이식 수사' 운운하며 재벌 보호

동아일보는 9월 3일자 사설 <주가조작 수사와 시장안정>에서 "다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다른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발목잡는 결과를 빚거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른몰이식으로 사건을 확대, 왜곡시키면 안된다"며 "불안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한 고뇌도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시 하락에 악재로 작용한 원인을 검찰측의 수사로 돌림으로써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같은 날 경제 1면에 실린 <금리 뛰는데 '이익치 쇼크'까지 설상가상 증시 허우적> 기사에서도 이러한 논조가 이어졌다.

평소 재벌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국일보와 경향신문도 이번만큼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전반적으로 기사가 적었던 한국일보는 9월 2일자 2면 <'BK펀드'로 증권가 신화, 이익치 회장 누구>에서 이익치 회장이 "지수 200p 올린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묘사하였고 3면 해설 기사 <"시세조정 의도 없었고 매매차익 보지 않았다">, 2면 <"현대주가 조작 그룹문제 아니다"> 에서도 현대 측 보도자료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실어줌으로써 정씨 일가와 관련된성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흥미성 기사가 많았던 경향신문 역시 9월 6일자 사설 <재벌 개혁 왜곡을 경계한다>에서 "누구든 탈세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 국제청장이 자청해 조사중인 사안의 당사자 이름을 공개하는가... 안해도 될 말을 강조하니까 '전방위 압박이다', '길들이기 사정 아니냐' 등의 눈총과 함께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개혁작업이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11일자 사설 <재벌 개혁과 재계의 항변>에서도 "개혁의 당사자인 재계에 재갈을 물리거나 재계의 주장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대한생명사태 등에서 드러나듯 초법적 밀어붙이기는 오히려 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혼란과 부작용을 부르기 십상이다"고 정부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전경련 회의에서 나온 주장중에도 귀를 기울일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며 "근본적인 문제보다 파생적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거나..."는

내용에서는 전경련 입장과 그들의 논리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이 근본적 문제이고 파생적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 문제보다 파생적 문제에 집착하는 당사자는 바로 재벌과 이들을 감싸는 언론이 아닌가. 현대 사건을 통해 재벌관련 정부정책에 비판을 가하는 것도 재벌감싸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결국 기득권의 경제 안정논리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재벌 개혁"이 축소,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소보도로 일관, 재벌은 여전히 성역

이번 사건은 재벌과 그 총수가 관련된 엄연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신문들은 검찰 발표가 있을 당시에는 조심스러운 논조로 정씨 일가와 관련된성을 언급 했을 뿐 이익치 회장의 소환을 기점으로 구속될 때까지 단순 범행사건으로 다루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논조는 중앙일보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9월 6일자 5면 <검찰 수사 수위 고민>에서는 정씨 일가가 관련되었지만 구속의 어려움을 서술함으로 축소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다음날인 7일자 2면에서는 이익치 회장이 소환됨에 따라 <이익치 회장 오늘 소환 검찰 "구속 수사 불가피">기사에서 '이익치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는 태도를 보였다. 정씨 일가를 비롯한 재벌의 오랜 관행과 엄연한 범법행위를 지적했어야 함에도 이익치 회장 소환 이후 단독 범행으로 못박음으로써 재벌 총수와 가족은 여전히 성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10일자 사설 <검찰수사 간섭논란>에서 중앙은 "우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당부(當否)를 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피의자 수사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건의 성격이나李회장의 신분으로 보아 그가 증거를 인멸

계열사 돈 풀어 株價 2배로 끌어올려

현대전자 '주가조작' 어떻게 했나

현대전자(주)는 1997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31일간 주가를 2배로 끌어올렸다.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000원 선에서 2000원 선으로 상승했다. 현대전자는 이 기간 동안 총 1000억 원의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돈은 현대전자의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액수였으며,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전자는 이 기간 동안 총 1000억 원의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돈은 현대전자의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액수였으며, 주가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국내외 20여개 언론 관련... 100여명 조사 '반도체 빅딜'과 관련 보도도 나와

현대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20여개 언론 관련 100여명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반도체 빅딜'과 관련된 보도도 나왔으며, 현대전자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현대전자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전자의 주가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현대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20여개 언론 관련 100여명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반도체 빅딜'과 관련된 보도도 나왔으며, 현대전자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현대전자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전자의 주가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성화를 유도한 기업인임을 알고 있다"고 이회장을 평가한 뒤 "신화를 일궈낸 애국자라고 봐주려는 얘기가 아니다. 의혹이 있으면 밝히되 그 과정이 신중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라도 진상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출금조처에 구속설을 흘리면서 대기업 총수도 언제든 부를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라는 그럴듯한 신중론을 퍼면서 검찰에 '으름장'을 놓고 이회장과 현대측을 교묘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조선일보도 이익치 회장의 소환을 기점으로 논조의

변화를 보였다. 검찰 수사 발표후 9월 2일자 3면 <현대전자 '주가조작' 어떻게 했나>에서 조선은 "검찰은 정주영 일가 가운데 누군가가 '주가 올리기'를 지시, 자금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주가 상승으로 수백억대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정몽헌-몽준-몽규-몽근씨 등 현대전자 주주들의 관련여부도."라며 정씨 일가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익치 회장의 소환을 기점으로 6일자 <"이익치회장이 주가조작 제의">, <'이회장 단독 작전' 가닥 잡은 듯> 등의 기사를 통해 정씨 일가를 배제한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축소 보도를 하였다.

과거 매카시즘 바람이 불거나 여러가지 사안으로 한 사람이 여론재판 당하는 경우, 언론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고 신중론을 주문하는 것, "자원 없는 나라에서 유일한 살 길이 인재양성이다" (권영빈 칼럼 중)는 식의 발언한 것을 경험한 독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 여론재판을 주도한 것은 언론

이었다. 그것이 조작사건이든 혐의가 불분명한 것이든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유독 재벌문제와 그토록 강조했던 시장질서를 거스른 인물에 대해 언론이 이토록 보호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문화일보 '독립언론' 주장은 허구

현대로부터 독립했다며 '독립언론'임을 내세우던 문화일보는 그러나 이번 사안을 축소보도한 대표적 신문이다.

석간신문으로서 9월 1일자에 첫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9일자 1면에서는 <이익치 회장 영창 청구> 기사를 왼쪽 하단의 2단으로, 10일자 1면에서는 <이익치 회장 구속>을 왼쪽 하단의 1단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기사크기와 분량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축소 보도하는 데 급급했다. 또 현대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보다는 현대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사화했다. 관련 사설도 없었다.

<증권업계 李益治회장 구명운동>, <"한국경제 희망 심고 싶었는데...">李회장, 영창실질심사때 끝내 울음>, <대외신인도 타격우려 '충격'> 등의 제목을 통해 문화일보가 이적도 현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일보는 이번 사건이 터진 4월에도 9일자 경제면 2단으로 <현대중-상선 주가조작 혐의/금감원, 수사의뢰 ... 현대측 "사실과 다르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참여연대가 현대그룹 일가와 이익치 회장을 고발한 6월에도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 (민언련 신문 모니터분과, <재벌눈치보느라 흔들린 '독립언론' 맹세>, 월간 말 7월호 참조)

그야말로 '독립언론'이 구호에 그쳤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권영빈 칼럼

항아리 속 참깨



최근 언론계에서 '항아리 속 참깨'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론이 권력에 편승되어 권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은 권력에 맞서서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진정한 '항아리 속 참깨'가 될 수 있다.

정치논리로 본질 흐리기

이번 사건에서 언론은 경제적 범죄 행위라는 진실보도를 의면한 채 정치적 논리로 본질을 호도했다. 이 사건의 불법성과 재벌의 금융지배의 폐해를 지적하고 누가 개입되고 왜 했는가와 기본적인 접근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논리를 지배적 시각과 표적 수사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9월 3일자 사설 <현대의 '주가조작' 파장>을 통해 "현정부의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기업의 변칙적인 증권투기 관행을 손보는 것이라면 정치논리의 경제지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정치적 해석에 급급해 주가 조작이라는 경제적 범죄사실을 의면했다. 다음날인 9월 4일자 사설 <전방위 재벌 개혁>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재벌 정책을 무조건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시각은 동아일보 3면의 <금감원-검찰 지목한 주모자 달라>에서도 잘 드러났다. 동아는 이번 사건을 "현대 길들이기", "이익치 회장을 표적 삼은 것은 모종의 정치적 이유"라는 등 정치적 해석으로 본질을 비켜가는 태도를 보였다.

앞의 신문들과 달리 한겨레는 이번 사건을 정씨

現代의 '株價 조작' 과장

현대그룹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가(株價)를 조작했다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검찰 발표 내용을 보면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池) 회장 등이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자금 2200억원을 동원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2배도 끌어올림으로써 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권한 발표대로 조직적인 작전(作戰)으로 주가를 올렸다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일부 재벌그룹이 과거에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이런 나쁜 관행이 법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선례(先例)를 남기는 첫 번째 처벌 수사를 세우는 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또 이번 수사란 계기로 변법(變法) 각종 무덤과 음해성이 난무하던 우리나라 증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증시판권이 정화되고 증권시장의 선진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대측이 주장한 대로 '계열사가 매입한 현대전자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매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증권거래법 위반인

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가려내는 법외 관습직업이 있어야 하겠지만, 실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수천억원의 돈을 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일 기업의 유상증자 계열분리 자본승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 그것과 증권거래법과의 상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행정부의 재벌 집들이기 수단으로 기업의 변칙적인 증권투기 관행을 손보는 것이라면 정치논리의 경제제타라는 의의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벌써부터 현 정부와 현대그룹이 한데 '수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었는데 왜 갑자기 현대그룹을 압박하는지는 의문이 없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도널드 럼즈펠드' 옹기 빌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쪽의 의욕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현대가 벌을 여기며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면 사회와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대는 한국 재벌들 다루는 재벌이다. 재벌은 재벌다워야 한다. 아무리 돈버는 게 직업이지만 거기에도 법은 있고 윤리는 있어야 한다.

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논조를 보였다. 9월 7일자 9면에서 <어느 '마름'의 몰락>, <이익치 회장 구속으로 끝나나> 기사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씨의 '단독결정'이 아닌 정씨 일가가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신문과는 달리 수사 확대 추구를 강조하였다.

한겨레는 또 9월 11일자 사설 <이익치 회장 구속으로 끝나나>를 통해 "경제 악영향을 내세운 정치권과 재계의 압력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 결정을 내린 검찰의 조치는 법치주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일단 평가받을 만하다" 라고 평가함으로써 외압수사 운운하는 신문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대한매일 역시 전반적으로 수사에 대한 보도성 기사가 많았지만 사실을 통해서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추구하고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9월 3일자 사설 <주가조작 수사 엄정·신속히>에서 이 신문은 "검찰조사 결과 주가조작을 주도한 기업이

증시발전에 기여해야 할 현대증권으로 밝혀져 더욱 개탄스럽다. 조작의 장본인이 주가를 전반적으로 올려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목청을 높여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이회장의 과거를 높이 평가하며 본질을 흐리는 신문과는 분명 다른 태도를 보였다. 또 "금감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9월 7일자 사설 <재벌개혁 확고한 의지로>, 10일자 사설 <재계전체가 개혁 추진해야>에서 대한매일은 정부와 '가까운' 신문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7일자 사설에서 이 신문은 "당국자들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당부한다. 재계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한눈을 팔지 말고 정치권은 선부른 당략적 정치논리로

이익치 회장 구속으로 끝나나

현대그룹 주가 조작 사건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실상 일단락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사건의 성격이 나 날려야 할 정도로 이익치 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이 이런 견해를 내리기까지 고인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악영향을 내세운 정치권과 재계의 불구속 기소 또는 사법처리보류(留保) 압박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 '구속 처리'가 드러지는 듯하기도 했다. '그러나'도 구속 결정을 내린 검찰의 조치는 법치주의 구현이란 측면에서 일단 불가함을 면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제 구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현대그룹 으리인 정몽헌 회장을 비롯한 정씨 일가의 자입 의혹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100억원의 현대 계열사 자금과 동원해 증권 매매 등의 수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000원에서 3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현대 계열사 및 정부 입자가 엄청난 불모수익을 올렸다고도 지적된다. 명색이 시장경제를 사할한다는 나라에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도 아직 사법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인이 벗어난 것은 유감이다. 그의 구속이 공인신상에서 경제개혁의 대의를 내세워 정부 차원에서 재벌을 감시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대부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씨가 구속되면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된다는 현대와 전권계의 주장이 면하는 걸과다. 그 여파로 이씨 처리는 구속과 불구속, 국가조작, 사익을 오가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이씨의 구속으로 결말이 보지만, 정부 차원의 어떤 태도는 공정한 법집행을 저버리는 것이다. 실사 그거 경제 회복에 일부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의 불투명성은 결코 면할 수 없다.

현대의 주가 조작이 이씨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으리가 경영권 차지무치하는 재벌계 특유에서 합법적이 오히려 내근한 2천여억원의 계열사 돈을 동원해 '근'을 벌이거나 그리 쉽지 않던 것이란 걸 봐도 근거다. 게다가 정몽헌 회장 일가는 국가조작 기간에 4400여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정 씨를 오는 10~18일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세 사람이 사법처리되고 밝혀졌던 정몽헌 회장이 정씨에게 불모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연막작전이란 시각마저 없지 않은 법외 관행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시종일관 "김대중 대통령은..."으로 시작하여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강조, 그의 발언을 해석해주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재벌개혁에 대한 전반적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8일 있었던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를 주 내용으로 10일자 사설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제까지의 언론은 정부의 개입은 무조건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비판해왔으면서 이번 "현대전자주가 조작" 사건은 재벌가와 그 총수가 관련되었음에도 그 본질을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시장 경제논리의 이중잣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증시를 위해 언론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남겼다. 다수 국민들의 재벌개혁 열망을 무시하고 오히려 재벌을 보호하는 반 개혁 세력. 언론은 재벌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개혁대상 1호다.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의 현장감있는

강의가 일품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부터

매 강좌 실시하는 **실습**

사진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사

김형식(사진실험공간PARA실장),

박진희(사진실험공간PARA사진가),

이정용(한겨레21사진기자)

● 강의내용

근대적 시선(투시법)

동일시의 시선

초점, 노출

사진적 요소와 원리(심도, 동감)

응시의 시선

시점, 프레이밍

르네상스적 시선과 바로크적 시선

조형적 요소와 원리

광선의 유형과 방향

인공광의 특성과 활용

이미지와 텍스트

구성방식(포토스토리, 시리즈, 시퀀스)

몽타주, 다중시점, 유형학, 포토-텍스트

기간 2개월 매주 수·토 주 2회 진행 16강좌
수강료 200,000원

사회관련 보도 모니터 IV-1

경쟁사회



반칙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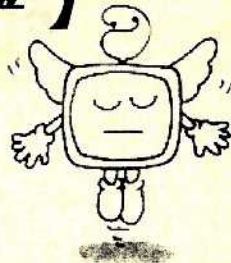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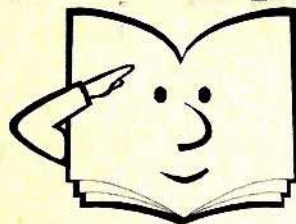
기사가 사회를 낳는가, 아니면 사회가 기사를 낳는가. 현실을 담아야 하는 신문의 '사회면', 그 네모난 링 안에는 사회 문제들이 쌓이고 넘쳤다. 프로 레슬링 경기처럼 언론과 정계와 재계는 서로 서로 싸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특정 선수를 키워주기 위한 전략으로, 관객들의 흥미와 흥분을 자아내는 방안으로, 매일 링 안에 반칙왕만 들여보내는 것이다. 반칙인 것을 모르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지, 사회면을 읽는 독자들은 사회가 그런 줄로 인식한다. 비단 예리한 독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사회상이 왜곡되었다"는 것 외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숨겨진 사회의 환부는 굼아간다. 재차 묻는다.

사회가 기사를 낳는가, 아니면 기사가 사회를 낳는가.

경쟁사회 반칙언론

- ▶ 영화 '쉬리'관련 보도
- ▶ 7월 17일 사회면 보도
- ▶ 국민중앙고의 선도 MBC 산업사건관련 보도
- ▶ 수면관련 보도
- ▶ 8·15사건관련 보도
- ▶ 동해모르 독립관련 보도
- ▶ 노근역양면역살관련 보도
- ▶ 중앙일보사태관련 보도

【신문·방송 모니터 학고】



사회를 투영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

메스컴을 받아들이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버릴 것을 알고

접근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강좌입니다.

강사 ●	최민희(대안적 기획감독), / 최영민(방송전문인 선임연구원), 박용진(방송전문인 선임연구원) / 김중배(미디어오늘 편집부 부장), 김은주(대안적 신문모니터부 부장) / 정희중(대안적 미디어연구소 부장)
강의내용 ●	/ 대안적 평가, 왜 하는가 / 영상언어의 이해 / 방송프로그램 평가(드라마, 시사·보도, 쇼·오락) / 신문편집의 숨은그림 / 신문의 왜곡보도 / 대안적 평가 시스템

기간 : 주2회 매주 화·목 7-9시, 총10강
수강료 : 50,000원



영화 [쉬리] 관련 신문보도 한겨레, 대한매일 2월21일-3월8일 조선, 동아, 한국, 중앙

한국 영상문화를 어둡게 한 <쉬리> 관련 보도

영화 『쉬리』 열풍이 불고 있다. 이 영화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연일 기사로 실리고 있고 관객 수 13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례적인 흥행기록도 세우고 있다. 스타시스템을 잘 활용한 배우 선정, 헐리우드 영화에 ‘버금가는’ 특수효과와 액션, 역사상 최대 제작비는 물론 8억이라는 엄청난 홍보비 등으로 이 영화는 주목받지 않을 수 없는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에 대한 언론보도는 주로 영화의 흥행기록과 배우의 수입 등 상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더 나아가 ‘새 지식산업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영화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 등의 내용으로 스크린 쿼터제 폐지를 둘러싸고 흥역을 앗은 영화계에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영화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북

한의 이미지를 그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생사함을 찢어 죽이면서 훈련하는 섬뜩한 장면에서부터 북한 여 첩보원이 ‘조국통일 만세’를 외치며 자결하는 모습 등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테러와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북한 첩보원의 전반적 모습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그들의 테러를 저지하려는 남한 첩보원의 역할은 북한 첩보원에 대한 이미지와 대조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 영화가 아무리 상업영화임을 표방한다고 해도 반복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지적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 않으면 ‘상업영화는 어떠한 소재나 내용전개라도 재밌으면 그만이다’라는 일면 무책임한 논리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기사가 결여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다.

'쉬리' 신드롬' 신지식산업 새 이정표 세웠다

■오늘 '서편제' 103만명 경신... 성공요인은 탄탄한 시나리오·캐스팅에 과감한 투자

‘불황기에 영화호황’ 개봉시기 행운급쳐 對北포동정책 따른 외적 환경도 원동력



한국영화계에서 '쉬리'가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로 써준 것은 물론이다. 개봉 이래 103만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쉬리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스팅에 과감한 투자, 그리고 '불황기'라는 개봉시기의 행운급쳐, 그리고 '對北포동정책'에 따른 외적 환경도 원동력이 되었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스팅에 과감한 투자, 그리고 '불황기'라는 개봉시기의 행운급쳐, 그리고 '對北포동정책'에 따른 외적 환경도 원동력이 되었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은 탄탄한 시나리오와 캐스팅에 과감한 투자, 그리고 '불황기'라는 개봉시기의 행운급쳐, 그리고 '對北포동정책'에 따른 외적 환경도 원동력이 되었다.

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인 할리우드 못지 않은 ‘영화산업의 도약’을 꿈꾸는 충무로 영화인들의 희망이 담겨있다”고 맺고 있다. 3월 8일자 <“영화계 밝힐 촛불이 됐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강제규 감독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이들 기사들은 대체로 영화의 상업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시각이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 역시 <총 제작비 31억... 엑스트라 3천명 쉬리 어떻게 만들었길래 (2/21 사회)>, <“아직 쉬리 못 봤니” 매일 관객 12만 명씩 몰려 (2/21 사회면 머리기사)>라는 기사를 쓰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쉬리와 타이타닉의 일주일간의 관객 수를 비교, 여론몰이를 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었고 관객들이 모이는 배경과 영화평가 관한 진지한 접근은 없었다.

대한매일은 <‘쉬리 신드롬’ 신지식 산업 새 이정표 세웠다. (3/6 영화 13면)>라는 제목으로 “한국영화계에서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한계치를 극복해낸 것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지식형 산업 틀’의 정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극찬했다. 또 같은 날 <전국 관객 500만 명, 150억 원 벌어들일 듯 3/6 13면>이라는 기사에서도 영화의 흥행과 흥행으로 인한 수입 등 영화의 상업적 가치만을 다루고 있다.

한겨레신문도 예외 없이 이 영화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11일자 [이명인의 영화 관람석]을 보면 “<쉬리>는 한국영화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어놓는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좀처럼 완성시키기는 힘든 상업적 성실성이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들의 철저한 장인정신이야말로 이 영화를 가장

영화에 대한 진지한 평가 없이 흥행 부각에 골몰한 보도들

많은 신문들이 영화내용에 대한 진지한 분석보다는 흥행과 ‘성공요인’ 분석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는 객관적 현상에 대한 보도라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가 갖는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쉬리 관련 보도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너무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2월 22일자 사설 <영화 ‘쉬리’ 돌풍이 뜻하는 것>에서 “미국 영화의 직배체제와 스크린쿼터제 축소압력 등으로 설자리를 잃어 가는 우리 영화계에도 좋은 작품이라면 관객이 몰린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쉬리’다”라며 이 영화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 영화에 들어간 30억 원이 넘는 제작비는 대기업이 한국영화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월 4일자와 5일자에서도 각각 <‘블록버스터’ 한국서도 꽃피울까>, <쉬리, 서편제 울리고 타이타닉 침몰 위협>이라는 기사를 다루었다. 특히 전자에서

빛나게 하는 요소다”라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듯 이 영화의 ‘장인정신’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다이하드 3’, ‘썬데스’ 등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케 하는 구성과 자칫 남북 대결구도를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지적 없이 상업적 성공을 곧 ‘성실성’으로 평가한

것은 영화 전반에 대한 평가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날 한겨레 역시 강제규 감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며 24일자에 실린 여배우 김윤진씨의 인터뷰 기사, 3월 6일자 사회면의 <쉬리 신기록행진>기사 등 영화 ‘알리기’ 기사가 많았다.

이들 신문과 달리 한국일보는 쉬리 열풍의 거품 현상을 우려하며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과 사회적 이슈화의 요인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는 <우리가 쉬리를 편하게 볼 수 없는 이유 2/26 14면>에서 헐리우드식 베끼기 영화에 대한 찬사 속에서 외면될 수 있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관객 100만 돌파한 쉬리 3/6>에서도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도 민족적 정서를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외부 청탁 원고를 통해 영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헐리우드 이진 ‘토종 쉬리’-한국영화 사랑 확인, 동아는 지나친 흥분은 금물 3/5 6면>이라는 제하의 영화평론가 강한섭씨의 글을 통해 흥행

할리우드 이진 ‘토종 쉬리’



시론
강한섭 (서울예술대학교수·영화평론가)
충무로가 헐리우드를 이겼다. 제작비 25억원을 들인 한국형 헐리우드 영화 ‘쉬리’가 1천5백여명의 제작비를 쏟아 부은 헐리우드산 블록버스터 영화 ‘타이타닉’의 한국 흥행 기록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쉬리’ 열풍으로 전국이 흥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시사회에서는 직원들의 기말보수를 받았고 국방부장관은 강동헌 나이지 이 영화를 국군관련 교육용 자료로 채택하려고 지시했다.
한국의 영화가 신문 논객을 넘어 사회면의 머리기사와 시사주간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시너지 신드롬(현상)으로 발전했다.
쉬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 하려는 호시거물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형 액션영화라는 새로운 장르 전략이 주효했다.” “그보다 다는 실 연류의 개봉 시점이 결정적이었다.” “아니, 한국 스퀴드와 스타의 스타다.” “영화의 스타와 스타의 연기도 그제 그런데 평론가들이 뛰어났다.” “아니

그러나 ‘쉬리’ 같은 영화가 전국적으로 3백만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되면 ‘일종의 시장 선점’이라는 시각적용의 부정적 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쉬리’가 남북의 정서란 대립을 소재로 한 데미지 인 대중영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을 교묘스럽게 상사시인 관제규감독의 선구자적 노력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쉬리는 젊은 관객만 사는 도장 풀고간다. 강감독은 그 도장 풀고가가 할리우드 영화들이 사는 신기를 가지고 있음을 우려하게 보여 주었다.
이 도장 풀고가를 보고 도가 은 흥행에 몰아나 우리 모두가 흥분을 내지 헐리우드를 그 르면다면 쉬리는 죽을 것이다.
영화 ‘쉬리’는 한국영화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징이다.
세계시대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쉬리가 성장할 지 못한다면, 그 세계 시대를 개척하지 못한다면 ‘쉬리’는 아주 시골 동네처럼 볼 수 도 있다. 우리는 분명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해쳐 나갈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쉬리’ 돌풍 좋아만 할 일인가

영화계 반가운 활력소-필적 성장 계기로 삼아야



기교
영화 한 편이 불리워 오르는 놀라운 효과 한 가운데 우리 눈에 있다. 한국 영화도 해낼 수 있다. 이는 자신감,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대, 대기업 자본이 동원된 만능 동기가 부여되고 장르 개척이 한걸음 수월해지겠다는 예측과 논리가 연일 PC통신을 때우고 언론 방송을 오르내린다.
‘쉬리’가 개봉 얼마무렵에 전국에서 1백10만명의 관객을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한 달 만에 퍼졌다. 스크린쿼터 문제 때문에 흥행이 위축된 나날을 보낸 영화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날보며, 우리 영화의 연간 제작편수가 불과 40편으로 축소된 현실에 비추어선 다들 흥스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이렇게 거대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대중이 실 연류와 어느 시기를 걸치게 보냈던 그제 한순간에 ‘쉬리’는 장안판을 만한 가치가 있다.
‘쉬리’가 큰 성공을 거둔 배경은 무엇일까. 제작비만 25억의 대대적인 홍보와 언론의 전폭적이며 밀착한 ‘지원사격’. 연휴특수, 이른 외적 배경과 함께 멜로드라마에 익숙한 관객과 규모가 큰 액션드라마에 목이론 관객의 욕구를 적중 시킨 소파와 전개과정의 역동성.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 한적규 감독의 뛰어난 주연 배우들의 끈적 유인력이 인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이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쉬리’가 가져온 공과 비과, 타고난 피린 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 눈에는 여원심연시. 한 머리가 죽으면 다른 내시도 따를 것 같은 수면, 교만의 입도에 대한 평가는 확실히 거침이 있으며 그것은 한국영화의 미학적으로나 신적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애매하게 권력자 식으로 말한다면 ‘쉬리’는 부도덕한 영화. 존색의, 저급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면을 찾아지지 않았기



한국영화 흥행신기록 작성에 도전하고 있는 ‘쉬리’. 그러나 작품성면에선 논란도 만만찮다.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안타깝다. 액션은 다룬 우리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한 고였으나 이야기의 배치는 엉성하고 터러 시 대척오락이까지 하다. 도합시, 북한 공군단 침투조의 훈련과정은 인간이건 포가한 상태에 서 진행했다. 소수의 민간군이란 설정을 넘어 북한의 대표성을 띠어가는 그들은 영화 내내 비현실적이어서 감추를 멈추지 않는다.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반정부 열인 이 아니라 오히려 ‘쉬리’의 아태드모기인 셈이다.
구성은 전체를 덮어 치밀한 것 아니냐가 기분이적이다. 아방화물 둘러싼 가지 북한 은 반정부 위해 미련한 것이 불기하다. 남한 국사의 어둠은 깊어도, 황제도, 고종도 없는 감 상이다.
밀한 인간과 교과사적인 역사에서, 강력인 원심연시. 한 머리가 죽으면 다른 내시도 따를 것 같은 ‘카시구리’라는 상징적에는 이따금 구제해결이 너무 연약하다.
며 큰 문제는 흥행이 면해두고 승자가 모든 걸 갖는 풍류에 있다. 영화와 영화의 만든 이의 관객 모두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원심사 리는 부도덕한 영화. 존색의, 저급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면을 찾아지지 않았기

전략의 범주를 넘어 쉬리의 흥행을 한국경제와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 쉬리에 대한 성급한 낙관론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2월 25일자에서 평론가 김정룡씨의 글 <'쉬리'돌풍 좋아만 할 일인가>을 통해 "액션은 다른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정교했으나 이야기의 뼈대는 앙상하고 더러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 ...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헤치는 것은 박무영 일당이 아니라 오히려 '쉬리'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화내용상 드러난 반복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부각, 흥미위주로 다룬 신문이 있었다. 바로 조선일보다. 영화, 사회, 종합, 정치, 오피니언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면을 통해 <쉬리> 보도에 가장 열중한 조선일보는 남북 첩보영화라는 소재가 주는 이념적 측면을 자사논조에 맞춰 부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영화 쉬리보다 더 강한 훈련받는 707부대 - 북 특수 8군단 우리보다 한 수 아래 (3/6 사회)>란 기사는 707부대의 사격장면을 담은 사진에 "북 특수 8군단 물렸거라"라는 캡션제목을 달고 있다. 이러한 기사는 남북대결 구도를 흥미성 기사의 소재로 삼고 더 나아가 남한이 우월하다는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

넙비 저널리즘의 전형 보여줘

이상 <쉬리> 관련 보도는 내용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부족한 채 흥행결과를 좇아 보도하는 데 주력, 넙비저널리즘의 전형도 보여주었다는 비판이다. 할리우드 스타일을 모방,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지향하며 만든 상업+영화에 대한 비판 없는 보도로, 언론은 쉬리 열풍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일본 문화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때이다. 또 최근 논의를 마친 방송법안이 언론사, 대기업,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 MBC민영화 등 산업

논리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영화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업적 측면'에 몰두하며 마치 한국영화의 나아갈 방향인양 법석을 떠는 언론의 태도는 영상물의 문화적 가치를 무시, 영상문화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안정 헌신짝 "해도 너무해"

헌신짝 '노동안정'... 고용안정 헌신짝 '해도 너무해'... 헌신짝 '노동안정'... 고용안정 헌신짝 '해도 너무해'...

헌신짝 '노동안정'... 고용안정 헌신짝 '해도 너무해'... 헌신짝 '노동안정'... 고용안정 헌신짝 '해도 너무해'...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극흥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극흥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극흥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극흥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필레토비가 동성애자?

필레토비가 동성애자? '필라' 가만 '필름' 미러송... 필레토비가 동성애자? '필라' 가만 '필름' 미러송...

필레토비가 동성애자? '필라' 가만 '필름' 미러송... 필레토비가 동성애자? '필라' 가만 '필름' 미러송...



TV 유아프로그램 '곰피마 필레토비'에 나오는 필레토비 인형 가운데 하나인 '보리콜이'.

각 일간지 사회면 모니터 최근 사회면, 발로 뒀 기사가 없다.

2월4일-2월24일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가십성·흥보성 기사 범람, 사회면의 실질적 축소 초래

최근 각 일간지의 사회면이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는 고발성 기사는 적은 반면 흥미 위주의 가십성 기사, 미담기사가 많아 전반적으로 연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로 뒀 기사보다는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가 더 많았으며 각 신문사에 대한 흥보성 기사까지 사회면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 비판 감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십성 기사로 '때운' 사회면

각 신문은 흥미위주의 가십성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한 반면 사회성 짙은 기사들은 축소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해외도피재산 관련 기사는 1면 보도 기사 외에 사회면에서는 대부분 신문에서 2단 정도로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다.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연성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신문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사건, 사고 기사를 거의 신지 않은 반면 국제면 가십용으로나 실릴만한 외신, 가볍게 읽고 넘길 흥미위주의 기사를 자주 실었다. 대표적인 예가 케네디 2세 한국방문 관련 기사다.

이 기사는 2월 5일, 6일, 9일 3일에 걸쳐 사진과 함께 박스기사가 실렸다. 1면에 상반신 컬러사진까지 실린 5일에는 출판기념회를 위해 온 케네디 2세에 대해 패션감각, 스캔들까지 시시콜콜 알려주고 있다. 비록 그가 정치가로서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고 집안배경이나 외모 등 대중의 관심을 끌 요인이

텔레토비가 동성애자?

"활간 가방·형동 아리송" 美유아학자 주장에 논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TV프로그램 '텔레토비'(영국 BBC 제작)의 주인공 중 하나인 보라늑이(원명 Tinky Winky)가 미국에서 동성애 논란에 휘말려 화제다.

미국 유아교육 학자인 제리 란델은 최근 "보라늑이가 빨간색 손가방을 들고 있거나,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들을 보면 보라늑이는 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빨간색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게이들의 상징"이라며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내 관련을 소유하고 있는 잇시비시(Itsy Bitsy)사의 스티브 라이스 대변인은 "보라늑이의 가방은 일종의 '마술막'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있는데 무슨 영향도 소"라"고 일축했다.



TV 유아프로그램 '고요마 벨레로비'에 나오는 텔레토비 인형 가운데 하나인 '보라늑이'.

영국·미국에서 어린이들의 꼭 받아줄 인기인 인기 있는 텔레토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KBS-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장정은 기자

eechoon@dongang.co.kr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흥미위주의 내용에 지나지 않은 기사내용을 보면 '황색신문'과 다를 바 없었다는 비판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반면 6일자 사회면에는 고 강경대군의 부친이 15억을 사회에 기증한다는 기사가 단신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리의 영토크기를 비교하듯 케네디 2세 기사 옆에 아주 조그맣게 보도되었다.

3일자에는 메시아의 재림을 보기 위해 종말론자들이 몰려들어 예루살렘시 골치를 앓고 있다는 <'밀레니엄 신드롬' 예루살렘시 골치> 기사가 실렸고, 핸드폰(현대 걸리버) 광고 관련 다리 모델이 따로 있다는 기사를 컬러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였다. 13일자에는 47세의 주한 미 상의회장이 28세의 한국 여성과 결혼한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날 박찬호가 20만 달러에 LA에 호화빌라를 구입했다는 기사도 9일자에 이어 사진으로 다루어졌고 14일자는 사회면 절반에 걸쳐 <89세의 할머니가 정치개혁 위해 대륙 횡단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면의 본 취지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다.

중앙일보 역시 11일자 <텔레토비가 동성애자>라는 기사를 비롯 18일자의 <베토벤 사인은 남중독> 기사가 실렸다. 모두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으로서 눈길을 끌기 위한 기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에서도 가십성 기사가 적지 않았다. 7일자 <미 13세 소년 백만장자 됐다>, 21일자의 <미 연예인들 성형의사에 농락>당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은 '해외도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14일자에서는 박스기사(3단)로 <"주막강아지" "골목강아지" 전직대통령 이전투구/ "나라망신" PC 통신 '개 논쟁' 저질공방 비난쇄도>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김영삼씨가 직·간접적으로 인신공격성 저질 발언 공방을 벌이자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는 흥미성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일보에는 고발성 기사도 눈에 띄었다. 2월 11일자 사회1면 머리기사인 <통화 못해도 '안내음' 나오면 요금 몰려/ '바가지' 휴대폰 분통>는 "휴대폰에 전화를 걸 경우 통화중이어서 통화도 못한 채 전화를 끊어도 전화료가 부과돼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화를 하지 못했지만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전화료가 계산되기 때문이다"라며 휴대폰 요금체계의 일부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2월 19일자 사회1면에서는 <목적자가 재판관?/ '고통사고 때 결정적 증거 채택, 허위진술로 엉뚱한 피해 속출, "사례비 노린 직업목적자 있다">라는 제목으로 "일선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불확실하거나 조작된 목적자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해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두 기사 모두 다른 신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취재가 반영된 기사로 평가받았다.

한편 대한매일의 경우 설을 전후하여 명절 관련 기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었다. 더군다나 실제로 체감경기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

문은 12일자 머리기사로 <보너스로 지급 '두둑'·제수용품 구입 '복적' / 중기재래시장 "설 기분 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상당수 기업들이 체불임금과 설날 상여금을 지급, 고향을 찾는 근로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재 실업인구가 200만에 이르고 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더 많은 실업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98년 3사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했고, 가계지출은 13.9%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실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 기사는 노사정 위원회가 갈등을 겪는 상황, 특히 노정이 갈등이 겪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후 설 연휴 기사는 2월 13일, 14일 18일 모두 사회1면에 올랐고 14일과 18일에는 머리기사로 다루어졌다. 14일에는 <2,700만 고향 찾기 '대이동'>이라는 머리기사 외에도 <설 연휴 눈·비온다>(2단), <귀성·귀경 교통정보 인터넷 서비스>(2단)를 실었다. 반면 <최순영 회장 해외유출 재산 스위스는행분산 예치 포착>기사는 2단으로 작게 취급되었다.

2월 18일 사회1면 머리기사는 <체증 있어도 불법은 격감/ 전용차로 위반·갓길운전 작년의 20%수준>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의 집계를 인용한 각종 통계치를 다루었다. 이 기사 바로 아래에는 3단으로 <귀경길 비교적 소통 원활>이라는 제목의 설 관련 기사가 있다. 이날 역시 2단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무더기 적발>이라는 고발 기사가 다루어졌다. 2, 3쪽지의 설 연휴 기사가 과연 사회면에 60%의 지면(기사량=100)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사회면의 연성화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사 홍보기사 많아

조선일보에서는 실업이나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설날도피현상 그롭키운 대표적 2세 경영인



한국기업총연합회 회장 최순영(가운데)은 204년부터 한동안 한국기업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온 최순영 회장의 모습이다. 사진은 한국기업총연합회 사내 기자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기사인.

금융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명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실어 주목 받았다. 4일자 <동원그룹은 [인재 어장] / 회장은 무협회장 ...증권사장은 주택은행장에> 기사는 경제면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 홍보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비판받았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아 최순영회장 관련 보도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11일자 사회면에서 최 회장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날 사회면 머릿기사는 <독실한 기독교인 '스포츠광' / 금융실명제 최다액 전환 "화제" / 그롭 키운 대표적 2세 경영인>라는 제목을 뽑았다. 이 기사는 외화 도피혐의 등 그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신앙생활과 운동애호가로서의 면모를 다루는 데 치중하였고 기사는 무려 10단에 걸쳐져 다루어졌다. 사진 역시 '축구협회장으로 국가대표팀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실어 전체적으로 비리혐의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동아일보의 경우 비교적 사회면 본연의 역할에

원 3000만원 성금'을 시작으로 '본사의료팀'을 운영한다는 기사를 8월 4일부터 3일간 사진과 박스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고려대 구로병원 등 7개 병원과 함께 수해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직접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병원들의 의료활동을 한국일보가 홍보해주고 그 대신 주관사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각 병원이 '공동구성'한 것으로서 '본사의료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재민을 돕기 위함보다는 '사세과시용'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세 과시용' 태도는 수재의연금에 대한 보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수재의연금 기사 문제 많아

'수재민 돕기 성금'에 대한 내용은 신문사들마다 앞다투어 매일 1면 혹은 2면에서 다루었다. 일부 언론은 사실에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고통을 나누고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시작된 이 수재민 돕기 성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의 온정에 호소하는 '계몽언론'의 모습에서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 조선일보는 8월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다시 일어서는 이웃에 '사랑의 손'을 내딛시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수해복구에

전국민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러한 보도들이 기여할지는 몰라도 더 이상 국민들의 성금이 최선의 구호대책인 듯한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을 제대로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8월9일자 기사다. <성금언론 문헌책임> (야! 한국사회)에서 필자 김진송씨는 "왜 언론은 난리를 치며 국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가...정은 정이고 제도는 제도다. 자발적 강제로 이뤄지는 성금을 마치 구호제도로 생각하진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방식이 통하는 것은 식민시기 이래 창궐한 슬로건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화모금의 이면에는 문제의 해결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슬로건이 만연한 사회의 위험성은 바로 슬로건의 표면에 비판과 비난을 받을 만한 명백한 혐의와 물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참신하고 좋은 지적이었다는 평가다.

또한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란을 보면 정치인들의 '금일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접수된 성금을 보도할 때 국회의장, 총리, 대법원장, 국회의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총재,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 등의 액수를 금일봉이라

고만 싣는데 관행이거나 하며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8월 10일자 <구태 못벗은 수재성금 보도>(음브즈맨 칼럼)이 잘 지적했다. 이 칼럼은 "금일봉이라고만 표시된 컬러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신문이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실은 쓰면서 왜 그들이 낸 성금 액수는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이 내는 '금일봉'이 과연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달이 지급되는 판공비의 일부를 전심 쓰듯 각 언론사에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자신들의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지인지도 밝힐 때도 됐건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와 "이제부터라도 민주화시대에 걸맞게 고위 공직자나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공사(公私) 구분을 분명히 하고 그 액수를 밝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은 자사홍보에 열중, 투명성 검증에 소홀히 한 언론의 책임을 적절히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성금을 낸 인기스타들은 사진과 함께 실어주는 것과 관련,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성금과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냐는 지적도 있었다. 성금의 액수에 따라 성금을 낸 사람의 유명도에 따라 보도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진 기사들

이 밖에 수해관련보도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화보'에 치중한 물량 공세식이었다는 점이다. '누가누가 많이 쓰나'하는 식으로 기사량이 여는 사건들보다도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사진과 그래픽으로 지면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양에 비해 기사의 깊이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진을

크게 실은 신문으로 특히 꼽을 수 있는 신문은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이다.

총평 및 대안

이번 수해 관련보도는 수해가 난 이후에야 정부의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고 떠들어대는 '냄비언론'의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의 소명이 권력을 비판, 감시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수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보도를 했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방식에 대한 반성보다는 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정부 뿐만 아니라 언론도 나서야 한다. 특히 방송과 달리 속보성이나 현장감이 떨어지는 신문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살려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해설성 기사나 기획 기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심도있는 보도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야! 한국사회



김진송
비평문화연구소

성금 언론 문헌 책임

우리는 왜 늘 그렇게 자국의 공상언론가 무신에 의해 때때로 엄청난 선의의 성금의 국민들이 손에 벌려야 하는가? ... (text continues)

성금 언론 문헌 책임

성금 언론 문헌 책임

성금 언론 문헌 책임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도 통했다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인권 걸림돌 제거

8·15 특별사면의 여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걸림돌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8·15 사면 관련 보도모니터

7월 27일-8월 14일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8·15 사면 관련 보도모니터

김현철 사면 속에 묻혀버린 양심수 사면 보도

54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54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8·15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였다. ‘20C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번 8·15사면은 그러나 양심수들의 일부 사면 속에 권력형 비리인사를 끼워서 내보내는 ‘비빔밥 사면’으로 그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김현철씨의 경우 죄 값도 치르지 않은 채 잔형 형기를 면제받는 등 이번 사면은 일반 국민의 법적 상식을 뒤집었다는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더 나아가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되새길 여유와 역사적 고려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비판 역시 면키 어려웠다.

이번 8·15사면에 대한 언론보도는 양심수 사면과 관련한 준법 서약서의 존재문제나 양심수 사면의 의미를 외면한 채 ‘김현철 사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보도에서 그 사면이 갖는 법적 부당성 및 사면 남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소극적 비판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양심수 사면은 정부의 은전?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김현철 사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김현철 사면 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관련한 논의나 의미에 관한 보도는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현철 사면에 관한 동경기사 및 청와대 입장

과 시각에서 사면을 바라보는 친정부적 논조를 보이는 신문도 있는데, 바로 대한매일이다.

대한매일의 경우, 단신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대부분인 가운데 눈여겨 볼 사설이 하나 있었다. 8월 14일자 사설 《8·15 특사 대화합 계기로》에서 이 신문은 “은 국민이 대화합의 토대 위에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정치철학이 그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어 “국민은 이번 특별사면·복권의 은전(恩典)을 입을 이들이 김 대통령의 깊은 뜻에 부응해서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 양심수들의 사면과 복권을 정부의 ‘은전행위’, ‘관용조치’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평가는 김현철 사면의 반국민적, 반국가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매우 소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김현철씨 사면과 관련, 이 사설은 “(김현철씨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반성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맺고 있다. 시종일관 김대통령의 은전을 강조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에 급급한 논조는 국민정서 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의 조치를 뒷받침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점이 바로 대한매일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도 통했다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인권 걸림돌 제거

8·15 특별사면의 여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걸림돌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8·15 사면 관련 보도모니터

7월 27일-8월 14일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에 長考, DJ ‘용서와 화해’ 고뇌의 선택.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도 통했다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인권 걸림돌 제거

8·15 특별사면의 여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걸림돌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8·15 사면 관련 보도모니터

7월 27일-8월 14일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김현철씨 사면 반대 여론이 뜨겁다. DJ는 용서와 화해의 고뇌를 겪고 있다.

도 통했다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손명순 여사 ‘호소’ 이회호 여사 DJ 설득.

인권 걸림돌 제거

8·15 특별사면의 여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걸림돌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파 및 밤.

8·15 사면 관련 보도모니터

7월 27일-8월 14일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양심수 사면문제는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가는 민주화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양심수와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은 대화합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이들의 양심적 행위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 노동 운동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인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의 잣대에 의해 철저히 묵살되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인권이 실종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에 인색하다. 오히려 준법서약서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신문은 바로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8월 14일자 사설 《정부 스스로 허문 '준법 서약'》에서 "장기간 복역한 사람에게 국가

자문해 붙이다"라고 쓰고 있다.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49명의 양심수와 이들을 사면한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다소 약화된 논조이긴 하지만 중앙일보도 이들 사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8월 13일자 4면 《공안 사범에 '헛별'》이란 재하의 기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준법서약을 하지 않아도 사면해 줬던 전례가 이번에 깨지게 됨에 따라 헌정부가 사상 전향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준법 서약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뒤따를 전망이다."라고 분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준법서약제의 위법성이나 양심수의 인권 문제를 착실하게 보도한 신문으로 평가받았다. 한겨레는 7월 29일자 사설 《인권의 걸림돌 준법 서약제》에서 "우리는 준법 서약제를 꼭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고 있다... 김현철과 비교, 법의 형평성에도 어

정부 스스로 허문 '遵法서약'

김대중 대통령이 단행한 '8·15사면'은 예상했던 대로 극히 바리케이트다. 그 규모가 그렇고 대상에 부합된 면면들을 봐도 그렇다. 김 대통령은 대변인 발표를 통해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보내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 국민성서 등을 고려해 어감이 완상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면된 역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 빛을 보게 된 것 자체는 축복이다. 그러나 이번 사면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한 엄밀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이 종래의 관행을 뛰어넘고 있다. 대통령은 공안사범 가운데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49명도 형집행정지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장기간 복역한 사람에게 국가의 유전을 베푼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준법서약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묵살해 버렸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가기강을 유습게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을 사 마땅하다.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으로서 준법서약 정도도 하지 않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자의 선택이었지만, 나라의 영(命)을 세워야 할 정부가 그것을 '인정' 또는 '복인'해 주었다는 것이 과연 세평이 서는 일인지 자문해볼 일이

인권의 걸림돌 준법서약제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앞두고 헌법에서 명시된 '사상헌정제도'와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특히, 근대 합법이론의 법리로 볼 때, '마음속의 법'의 제법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범죄 역사라도 그것이 평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 측 논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준법서약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이든 이를 억압할 수 있는 데서 정권 힘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패·비리 사범들에게도 준법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자신의 죄를 누우치기엔 판결이 불합격에 해당되고 김현철씨에게도 준법서약을 안 받지 않는다. 제도와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다. 준법서약 자체가 제법의 번지를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국민성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였을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집수호의 진정한 바탕이라고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관단제도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셋째, 준법서약제는 '사상헌정제도'와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특히, 근대 합법이론의 법리로 볼 때, '마음속의 법'의 제법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범죄 역사라도 그것이 평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 측 논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준법서약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이든 이를 억압할 수 있는 데서 정권 힘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패·비리 사범들에게도 준법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자신의 죄를 누우치기엔 판결이 불합격에 해당되고 김현철씨에게도 준법서약을 안 받지 않는다. 제도와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다. 준법서약 자체가 제법의 번지를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국민성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였을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집수호의 진정한 바탕이라고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8·15 특별사면과 복권을 앞두고 헌법에서 명시된 '사상헌정제도'와 헌법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특히, 근대 합법이론의 법리로 볼 때, '마음속의 법'의 제법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어떤 범죄 역사라도 그것이 평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 측 논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준법서약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사상이든 이를 억압할 수 있는 데서 정권 힘을 발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패·비리 사범들에게도 준법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자신의 죄를 누우치기엔 판결이 불합격에 해당되고 김현철씨에게도 준법서약을 안 받지 않는다. 제도와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다. 준법서약 자체가 제법의 번지를 보장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국민성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작은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였을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집수호의 진정한 바탕이라고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9일자 사설 《수배 해제로 '인권정부'의 길을》에서 수배자 사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사설은 "국민화합의 토대를 다지는 것의 하나가 이른바 시국사건과 노동쟁의 관련자들의 수배해제다. 수배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대단히 편협하다. 과감한 수배해제로 '인권정부'의 길을 열기를 당부한다."라며 양심수에 대한 수배해제와 사면을 거듭 강조했다. 8월 13일자 사설 《'부분 사면'도 납득할 수 없다》에서도 지난 정권의 권력형 비리인사에 대한 사면이 정치적 이유로 감행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을 보였다.

이밖에도 한겨레는 《국회의원 김현철?》(7/31 6면 윤후상 칼럼), 《김현철씨 사면 재고해야》(8/6 4면 사설), 《'비리 면제' 사면 역사 거스른다》(8/7 1면) 《집중 점점 남발되는 정략 사면, 정권 필요 따라 사정·사면 똑딱》(8/7 5면)등 김현철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사를 실었다.

한국일보도 사설과 외부 필자 칼럼을 통해 김현철 사면을 강력 비판하고 그 뒤에 가려진 양심수 석방 문제에 접근했다. 우선 8월 6일자 7면 《정달영 칼럼 - 더 큰 정치 보고싶다》에서는 양심수에 대한 언급에 이어 "용서와 화해는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나 법의 권위마저도 훼손하는 사면은 권한의 위험한 남용이다"이라며 "국민들은 김씨로부터 진심으로 누우치는 말을 듣거나 그런 태도를 본 일이 없지 않은가."라고 묻고 있다.

8월 14일자 6면 《순혁재 - '부메랑'된 김현철씨 사면》에서도 "김현철씨를 사면함으로써 8·15 사면은 정치적 쇼가 되어버렸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이라며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칼럼은 이어 "김현철씨 사면보다 더 급한 것은 양심수 석방이다. 나아가 고문·실종·의문사·조작

간첩·삼청교육대·언론통폐합 등 5, 6공의 인권범죄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 인권문제에 접근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7월 27일자 사설 <김현철 사면 안된다>에서 "김현철 사면은 「법앞에 평등」이란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치적 흥정대가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정권의 도덕성마저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 "김현철 사면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 아들이란 신분만으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국정농단을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부른 인물이다", "원칙을 벗어난 사면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훼손한다. 국민의 분노를 부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를 통치권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흔들고 불법을 조장한다"며 매우 강한 어조로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악화여론 눈치보며 소극적인 비판

김현철 사면에, 정치논리로 해석하는 데 그쳐 누가 뭐래도 이번 사면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양심수 사면과 김현철 사면이 갖는 의미를 확실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데 있다. 언론은 김현철 사면에 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자사의 입장을 다루는 사실이나 칼럼기사보다는 시민단체의 반응 및 외부 필진의 투고 형식을 빌어 김현철 사면을 비판,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신문들이다.

조선일보는 《'정략사면'에 범치 무너진다》(최용석 변호사/8.13), 《약속했으니 지키다?》(이상운 소설가/8.16)에서 김 대통령의 김현철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남발되는 사면권"》(한인섭 교수/8.7)에서 비판의 내용을 다루었고 중앙